

주간 통일정세

2014-36

Contents

I. 북한동향

1. 대남
2. 핵문제 및 외교안보
3. 대내정치
4. 경제
5. 사회

II. 동북아정세

1. 대북한 관련
2. 주변국 관련

III. 북한인권동향

1. 북한 내부 실상 및 대내외 동향
2. 북한인권
3. 탈북자
4. 이산가족
5. 납북자
6. 국군포로
7. 대북지원
8. 북한동향

주간통일정세는 북한 및 국내외 언론보도를 참조하여 작성된 것임.

I. 북한동향

1. 대남

가. 공식발언 및 성명과 담화

- 北 "대화와 대결은 양립 불가"...5·24조치 해제 촉구(9/15, 노동신문)
 - 노동신문은 15일 한미연합군사훈련 중단과 5·24조치 해제, 금강산 관광 재개 등의 조치가 선행돼야 남북 간 대화가 가능할 것이라고 거듭 주장함.
 - 신문은 '대화와 대결은 양립될 수 없다'는 제목의 논평에서 남측에 "북침 합동군사연습에 중지부를 찍고 반통일적인 법적·제도적 장치들을 제거해야 한다"며 "그것이 바로 대화의 문을 여는 첫걸음"이라 강조함.
 - 특히 신문은 5·24조치 해제와 금강산 관광 재개 문제를 통해 남북 간 대화와 협력에 대한 정부의 의지를 읽을 수 있다며 남측이 이 같은 "반통일적인 법적·제도적 장치"를 제거하지 않고 대화와 협력만 강조하고 있다고 비난함.
- 北국방위, 청와대에 '삐리살포' 중단 직접 요구(9/16, 연합뉴스)
 - 연합뉴스에 의하면 정부 당국자는 16일 "북한은 지난 13일과 15일에 국방위원회 명의로 남북 고위급 접촉 북측 대표단 대변인 담화와 유사한 내용의 통지문을 우리측에 보내왔다"고 밝힘.
 - 북한 국방위는 서해 군 통신선을 통해 청와대 국가안보실에 보낸 전통문에서 지난 13일 나온 고위급 접촉 북측 대변인 담화 내용과 같이 우리측이 삐리살포를 중단해야 대화의 문이 열릴 수 있다는 취지의 내용을 담은 것으로 전해짐.
 - 이에 대해 청와대 국가안보실이 14일 북한 국방위 앞으로 보낸 대북전통문에서 "우리 정부는 지난 2월 고위급 접촉에서의 비방·중상 중단 합의를 준수하고 있고 우리 체제의 특성상 법적 근거 없이 집회·결사의 자유를 제한할 수 없다"는 우리 정부의 입장을 거듭 강조했다고 보도함.

- 北 "내일 빠라 살포 南당국 대응 지켜볼 것"(9/20, 조선중앙통신)
 - 조선중앙통신은 남북고위급접촉 북측 대표단 대변인이 20일 탈북자 단체의 대북전단 살포가 정부의 '비호'를 받고 있다며 "우리는 남조선 당국이 21일 반공화국 빠라 놀음을 어떻게 처리하는가부터 날카롭게 지켜볼 것"이라고 밝혔음을 보도함.
 - 통신은 이어 "남북 사이에 신뢰를 조성하자는 청와대의 공언이 진심에서 나온 것이라면 빠라 살포를 무조건 중단하는 실천적인 용단을 내리게 될 것"이라며 "북남관계 개선의 출로는 여기에 있다"고 주장했음을 전함.
 - 통신은 또 "남조선 당국은 1차 고위급접촉에서 우리에게 체제상 특성 때문에 빠라 살포문제 해결이 불가능하다는 것을 이해시켰다는 낭설을 퍼뜨리고 있다"며 그 진실 여부는 김규현 남측 수석대표가 잘 알 것이라고 주장했음을 덧붙임.

나. 주요 매체 대남 논평

- 北, 인천상륙작전 행사 비난... "아시안게임 이념에 도전"(9/15, 연합뉴스)
 - 연합뉴스는 조국평화통일위원회(조평통)가 14일 인천상륙작전 전승행사를 비난하며 이 행사가 아시안게임과 남북관계에 미칠 결과에 대해 심사숙고해야 할 것이라 밝혔다고 전함.
 - 신문은 또한 조평통이 "이번의 도발 광란은 괴뢰패당이 떠드는 대화니, 신뢰구축이니 하는 것이 한갓 기만이고 위선이며 조선반도에서 대화의 유린자, 평화의 파괴자, 전쟁도발자는 미국과 괴뢰패당이라는 것을 만천하에 명백히 고발해주고 있다"고 주장했음을 덧붙임.
- 北 신문, 한미연합사단 편성 비난... "전쟁 도발 목적"(9/19, 노동신문)
 - 노동신문은 19일 '전쟁 도발을 위한 연합사단 창설 움직임'이라는 제목의 글에서 "미국-남조선 연합사단 편성은 명백히 새 조선전쟁 도발을 목적으로 한 무력 편성"이라고 주장함.
 - 신문은 이어 "문제는 미국-남조선 연합사단의 작전 범위가 조선반도에만 국한된 것이 아니라는 것"이라며 "미국은 남조선 강점 미군과 괴뢰군의 기동타격력과

원거리작전능력을 높이고 절대적인 군사적 우세로 우리 공화국을 압살하고 대륙으로 진출하려 하고 있다"고 덧붙임.

다. 남북 당국 회담 및 정치 관계

- 특이사항 없음

라. 대남 군사 관계

- 北경비정 1척 서해NLL 한때 침범…경고사격 받고 퇴각(9/19, 연합뉴스)
 - 연합뉴스는 북한 경비정 1척이 19일 낮 서해 백령도 인근 북방한계선(NLL)을 침범한 후 우리 군의 경고 사격을 받고 퇴각했다고 합동참모본부가 밝혔음을 전함.
 - 또한 뉴스는 합참이 19일 "북한 경비정이 오늘 낮 12시께 백령도 인근 서해 NLL을 0.5마일 침범했다"면서 "우리 해군이 경고통신과 경고사격 6발을 가하자 북쪽으로 퇴각했다"고 밝혔음을 덧붙임.

마. 남북 경제 관계

- 특이사항 없음

바. 남북 사회 관계

- 김영훈 체육상 등 북한 선수단 본진 87명 인천 도착(9/16, 연합뉴스)
 - 연합뉴스는 인천 아시안게임에 출전하는 북한 선수단 본진이 16일 오후 6시 평양에서 출발하는 고려항공을 이용해 서해 직항로를 거쳐 오후 7시22분 인천국제공항에 착륙했다고 전함.
 - 뉴스는 11일 먼저 도착한 1진에 이어 들어온 선수단 본진은 총 87명으로 체육상을 맡은 김영훈 국가올림픽위원회(NOC) 위원장과 손광호 부위원장,

김명립 선수단장, 역도와 사격, 체조 등의 선수단 등으로 구성되었다고 전하며, 11일 입국한 김영훈 위원장은 우리나라 장관급 인사로 박근혜정부 들어 남한을 찾은 북측 최고위급 간부라 덧붙임.

- 대통령(신뢰의 통로부터 열어나가야 함)과 당국자들의 '신뢰구축' 발언을 "북남사이의 대화와 협력을 거부하기 위한 방패막이"라며 "북남합의들을 이행하여 정치군사적 대결상태부터 해소해야 한다"고 주장(9.14, 중앙통신·노동신문·중앙방송)
- 現 남북관계는 남한 군부의 '韓·美 군사적 결탁 및 UFG 연습 등 反北 전쟁연습 때문'이라고 책임 전가와 '남북관계 개선과 대화에 관심이 있다면 합동군사연습을 걸어치우는 결단' 지속 주장(9.18, 중앙방송)
- 김관진 청와대 안보실장의 미국 방문에 대해 「전작권」 전환 재연기를 애걸하는 망동'이라며 「전작권」 재연기는 민족의 존엄과 자존심도 다 췌버린 추악한 반민족적 범죄행위이며 극악무도한 반역적 추태'라고 비난(9.20, 중앙통신)
- 새누리당 주호영 정책위의장의 당 원내대책회의에서 한 발언(빠른 시일내 北인권법 처리) 관련 "공화국에 대한 또 하나의 공공연한 도발"이라며 '미국과 결탁하여 국제적 압박공조를 실현해보려는 동족대결책동'이라고 비난(9.20, 중앙통신·민주조선)

2. 핵문제 및 외교안보

가. 공식발언과 제안

- 北, 유엔총회 개막 맞춰 "안보리 개혁해야" 주장(9/17, 노동신문)
 - 노동신문은 17일 "극소수 나라의 전략적 이해관계 추구를 위한 수단으로 악용되고 있다"고 지적하며 제69차 유엔총회 개막에 맞춰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개혁을 강조하며 총회의 권능 강화를 촉구함.
 - 신문은 특히 "국제관계에서 유엔의 중심적 역할을 다하려면 유엔의 민주화를 실현하고 특히 총회의 권능을 강화해야 한다"라며 "유엔총회가 제재와 무력사용과 같은 안보리 결의도 최종검토할 수 있는 권능을 가져야 한다"고 밝힘.

나. 주요 매체 논평

- 北신문 "美, 이란 핵협상서 양면전술...환상 버려야"(9/16, 노동신문)
 - 노동신문은 16일 '속에 칼을 품은 미국의 걸발린 웃음'이란 제목의 논평에서 지난달 7일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린 미국과 이란의 핵 관련 양자회담을 언급하며 "미국은 이란의 핵계획과 관련한 문제를 푸는 데 목적을 둔 것이 아니라 이 나라를 무장해제시키고 종당에는 이라크처럼 만들려 한다"고 비난함.
 - 신문은 이란에 대해서는 "미국이 겉으로는 추파를 던지지만 실제로는 칼을 시퍼렇게 갈고 있다는 것을 인식하고 경계심을 늦추지 않고 있다"라며 "이란은 속옷까지 벗어주는 어리석은 짓을 하지 않으려는 자세와 입장을 취하고 있다"고 두둔함.

- 北, 美 시리아 지역 공습은 "주권국가 붕괴 노린 것"(9/18, 노동신문)
 - 노동신문은 18일 '국제적 우려를 자아내는 시리아에 대한 미국의 공습'이라는 제목의 글에서 "시리아에 대한 공습은 반테러전의 간판 밑에 이 주권국가를 짓밟개버리기 위한 전략적 타산에 기초한 것"이라고 주장함.
 - 이어 신문은 미국의 공습 확대 계획에 대해 "시리아 정부의 동의 없는 공격은 국제법 위반"이라며 "반테러라는 간판 밑에 주권국가들을 임의로 선택하고 임의의 시각에 들이치곤 하는 미국의 무지막지한 행위에 국제사회가 강한 경계심을 표시하는 것은 우연치 않다"고 덧붙임.

다. 회담 관련

- 北 강석주 유럽 순방 종료... "고위급 접촉 대부분 불발"(9/16, 미국의소리)
 - 미국의 소리(VOA)방송은 강석주 노동당 국제담당 비서가 지난 6일부터 열흘간 독일·벨기에·스위스·이탈리아 등 방문했지만, 스위스를 제외한 3개국에서 정부 고위 당국자를 만나지 못하고 주로 정당 관계자와 회동을 했다고 보도함.
 - 강 비서는 스위스에서 이브 로씨에 외무차관을 만났지만, 스위스 외무부가 이 회동은 "수교국 간 정례 정치대화 차원에서 이뤄진 것으로 최소한의 수준에 진행됐으며 이례적인 것은 아니다"라고 했다고 VOA는 전함.

라. 대미국

- 北, 억류 미국인 재판에 스웨덴 영사 참관 불허(9/17, 미국의소리)
 - 미국의 소리(VOA)방송은 북한이 억류 미국인 매튜 토드 밀러에 대한 재판을 진행하면서 평양 주재 스웨덴 대사관 관계자의 재판 참관을 허락하지 않았다고 국무부 관계자를 인용해 16일 보도함.
 - 방송은 북한과의 외교 관계가 없는 미국의 '이익대표부'(protecting power) 역할을 하고 있는 스웨덴 대사관 측이 북한 당국에 억류 미국인들에 대한 영사 접근을 거의 매일 요청했지만, 대사관 측은 제프리 에드워드 파울은 6월 20일, 케네스 배 씨는 8월 11일 마지막으로 면담한 이후 만나지 못했다고 설명하며 밀러가 이미 교도소로 이송됐는지, 그가 배씨와 같은 시설에 수용됐는지는 대답하지 않았다고 전함.

- 北, '대통령급 美특사 보내야 케네스 배 석방 언급(9/19, 미국의 소리)
 - 케네스 배 씨의 어머니 배명희 씨가 18일 미국의 소리(VOA) 방송과의 전화 통화에서 아들이 지난해 6월 보낸 편지와 전화 등을 통해 전한 내용을 인용하며, 한국계 미국인 케네스 배(한국명 배준호) 씨를 억류 중인 북한 당국이 배 씨에게 미국의 대통령급 인사가 방북해야 석방될 수 있을 것이라고 언급했음을 전함.
 - 다만 배명희 씨는 "북한 당국이 아들에게 '대통령급'이라는 조건을 항상 언급한 것은 아니어서 이후 입장이 변했는지는 알지 못한다"며 "북한은 1년 전부터 아들에게 고위급 특사 방북의 필요성을 거듭 제기하고 있다"고 VOA는 전함.

- 北 억류 미국인 밀러 판결내용 공개...“美가 시비중상”(9/20, 조선중앙통신)
 - 조선중앙통신은 20일 '존엄높은 우리 공화국을 감히 걸고드는 자들은 그가 누구 이든 징벌을 면치 못한다'라는 제목의 '상보'를 발표하고 뒤늦게 밀러의 재판 과정과 내용을 상세히 공개한 배경에 대해 설명함.
 - 통신은 또한 상보가 "문제는 밀러의 범죄행위가 미 국무장관 케리를 비롯한 위정자들이 우리의 로켓 발사를 거들면서 우리 공화국에 대해 감히 '악의 나라'라며 인권문제에 대해 떠들어대는 것과 때를 같이해 감행된 것"이라며 "밀러의 범죄는 우리에게 대한 참을 수 없는 모독이고 우롱"이라 강조했음을 덧붙임.

마. 대중국

- 주한 中대사 "김정은 방중 실현될것...북중 정상관계 유지"(9/17, 연합뉴스)
 - 연합뉴스는 추귀홍(邱國洪) 주한 중국대사가 17일 "북한은 정상 국가로서 조속히 국제 사회의 범위 내에 유입돼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밝혔음을 전함.
 - 뉴스는 추 대사가 김정은 북한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의 중국 방문 가능성에 대해 "중·북 간에는 줄곧 정상적인 양자 관계가 유지돼 왔고 이전에 양국 지도자간의 정상적 왕래가 있었다"면서 "아마 앞으로 김정은 위원장의 방중이 실현될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밝혔음을 보도함.
 - 이어 추 대사가 이어 북핵 문제와 관련, "한반도에 핵무기 출현을 반대한다는 중국의 입장은 분명하다"면서 "그렇기 때문에 중국은 6자회담을 조속히 추진함으로써 한반도의 비핵화를 실현해야 한다는 점을 여러 차례 강조했다"고 6자회담의 조기 재개를 거듭 희망했음을 언급함.
 - 한편, 홍레이(洪磊) 중국 외교부 대변인이 17일 정례브리핑에서 추 대사의 김정은 방중 관련 발언에 대한 기자의 질문에 "중국과 조선(북한)은 (서로) 우호적인 이웃국가다. 우리는 각층의 우호적인 교류왕래를 계속 유지하고 있다"면서 "(그러나 김정은의) 구체적인 방문에 대해서는 제가 제공할 수 있는 관련 소식이 없다"고 대답했음을 덧붙임.

바. 대일본

- 北, "일본인 납북자 재조사에 1년 소요"(9/19, 연합뉴스)
 - 연합뉴스는 북한이 일본인 납북자 재조사에 1년이 걸릴 것이라고 18일 일본 측에 통보해 왔다고 밝힘.
 - 뉴스는 스가 요시히데(菅義偉) 일본 관방장관이 특히 "북한 측이 (특별조사위의 납북자) '조사는 전체적으로 1년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현재는 초기 단계로, 현시점에서 이 단계 이상의 설명은 할 수 없다'고 연락해 왔다"고 밝혔음을 전함.
- 일본, 북한에 납치문제 조사단 파견 검토(9/20, 니혼게이자이(日本經濟)신문)
 - 니혼게이자이(日本經濟)신문(닛케이)은 일본 정부가 북한에 일본인 납치 문제 조사단을 파견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20일 보도함.

- 신문은 또 일본 정부가 관계 성청(省廳)이 공동으로 구성한 조사단을 북한에 파견하기 위해 중국 베이징 대사관 경로나 유엔 총회를 이용해 북한과 당국자 접촉을 시도할 계획이라 전함.

사. 대러시아

- 특이사항 없음

아. 국제기구

- 특이사항 없음

자. 기타 국가

- 北, 프랑스와 개성城 공동발굴·전시회도 개최(9/15, 조선중앙통신)
 - 조선중앙통신은 15일 북한 민족유산보호지도국과 프랑스 국립극동연구원이 평양민속공원 조선민속박물관에서 개성성 공동조사발굴 전시회를 개최했다고 보도함.
 - 통신은 개성성 공동조사발굴 전시회 개막식에 룡주 민족유산보호지도국장, 엘리자베트 샤바놀 국립극동연구원 대표, 임마뉘엘 루소 북한 주재 프랑스 협력사무소 대표, 리취안화 프랑스 라파르즈사(社) 대표가 참석했다고 덧붙였다.

- 리수용 北 외무상과 이란 외무상(무함마드 자바드 자리프), 9월 14일 이란 외무성 청사에서 회담 진행(9.15, 중앙통신·중앙방송)
- 北-요르단, 9월 15일 항공로에 관한 협정(베이징) 조인(9.16, 중앙통신·중앙방송)
- 조선중앙통신사, 몽골 몬짜메통신사와 '협조와 교류를 가일층 발전시키기 위한 문제들 토의 및 합의'(9.16, 중앙통신·중앙방송)
- 駐北 쿠바 대사, 9월 16일 '北 정권수립일(9·9절)' 관련 대사관에서 연회 마련(9.16, 중앙통신·중앙방송)
- 리수용(외무상), 9월 15일 아시아·아프리카 법률협상기구 제53차 회의에서 연설(9.17, 중앙방송)
- 김영남, 9월 17일 '北 정권 수립'(9.9) 66주년 경축 재일본조선인총회단(단장 : 허종만 「총련」의장)과 만수대의사당에서 담화(9.17, 중앙통신)
- 北 노동당대표단(단장 : 강석주 당중앙위 정치국 위원이며 당 비서), 9월 14일부터 16일까지 이탈리아 방문(9.17, 중앙통신)
- 계춘영 인도 주재 北대사, 9월 12일 주재국 대통령에게 신임장 전달(9.17, 중앙방송)
- 정영철 니제르(*아프리카 중서부) 주재 北 대사, 9월 12일 주재국 대통령에게 신임장 전달(9.18, 중앙방송·중앙통신)
- 운요호 사건(*일본군함 운요호의 강화해협 불법침입으로 발생한 한일 간의 포격사건) 발생 139주년을 맞아 '운요호 사건은 무력에 의한 일제의 조선침략의 서막'이라며 '과거범죄에 대한 반성과 배상은 일본의 법적, 도덕적 의무이고 역사적 과제'라고 주장(9.20, 중앙방송·노동신문)
- 美 오바마 대통령의 'IS(이슬람국가) 격퇴 대책' 정책 연설(9.10) 관련 "미국이 감행하는 반테러전은 유엔헌장과 국제법에도 배치되는 불법무도한 행위"라고 비판(9.21, 중앙통신·노동신문)

3. 대내정치

가. 김정은 동향

- 北김정은, 청년조직 방만 질책... "조직생활 강화하라"(9/20, 조선중앙통신)
 - 조선중앙통신은 20일 보도를 통해 북한 김일성사회주의청년동맹 제4차 초급일꾼대회가 평양 4·25문화회관에서 개막했다고 전하며 북한 김정은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이 김일성사회주의청년동맹(청년동맹)의 말단조직이 제 역할을 원만히 못 하고 있다고 질책하며 청년들의 조직생활을 강화하라고 촉구했음을 전함.
 - 방송은 이어 김정은 제1위원장이 "일부 청년이 언어예절과 인사예절, 공중도덕을 바로 지키지 않아 건전한 사회적 분위기와 생활질서를 흐리게 하는 현상들이 나타나고 있다"며 "이는 청년동맹에서 도덕교양을 잘 하지 않은

결과"라고 질책하였다고 덧붙임.

- 이어 방송은 사상교양과 관련해 "청년들은 언제나 총대를 사랑하고 군사를 중시하는 기풍을 세워야 하며 제국주의자들의 사상문화적 침투 책동을 단호히 짓부셔야 한다"고 강조했음을 전함.

나. 주요 엘리트 및 간부 동향

- 北, 강석주 유럽순방 결과 보도...“솔직한 의견교환”(9/18, 조선중앙통신)
 - 조선중앙통신이 18일 강석주 노동당 국제담당 비서의 유럽순방 결과를 이례적으로 상세히 전함.
 - 통신은 '조선노동당 대표단의 독일·벨기에·스위스·이탈리아 방문과 관련한 보도'를 통해 강 비서가 지난 7일부터 16일 방문 국가의 정부·정당·경제계 고위 인사와 유럽의회 관계자를 만나 북한과의 관계 발전 문제에 대해 논의했다고 밝힘.
 - 또한 통신은 이브 로씨에 스위스 외무차관, 엘마르 브록 유럽의회 외교위원장 등 강 비서가 만난 20여명을 모두 소개하며 명단에는 이미 보도된 인물에 더해 스위스 외교부 아시아태평양지역담당국장이 새로 포함됐음을 전함.
 - 이어 "회담과 대화들에서는 조선과 유럽의 정치·경제 정세가 통보되고 공동 관심사에 대해 깊이있고 솔직한 의견 교환이 진행됐다"며 많은 문제에 대해 상호 이해를 표명하고 다양한 분야에서 관계 발전을 위해 적극 노력하기로 합의했다고 통신은 전함.
- 北 강석주, 몽골 방문...대통령 면담(9/19, 조선중앙통신)
 - 조선중앙통신은 유럽 순방에 이어 몽골을 방문한 북한 강석주 노동당 국제담당 비서가 차히야 엘벡도르지 대통령을 면담했다고 19일 보도함.
 - 통신은 엘벡도르지 대통령이 이 자리에서 양측의 '전통적인 친선관계'를 강조하며 "조선과의 관계를 발전시켜나가려는 몽골 정부와 인민의 입장은 확고하다"고 말했음을 전함.

- 북한 임원진 '스포츠 외교' 활발(9/19, 연합뉴스)
 - 연합뉴스는 조선올림픽위원회 부위원장을 맡은 장수명 북한 체육성 부상은 18일 오후 대회 본부호텔에서 셰이크 아흐마드 알파하드 알사바(51·쿠웨이트) 아시아올림픽평의회(OCA) 회장을 면담했다고 전함.
 - 뉴스는 또 북한 선수단의 최고위급 인사인 김영훈 조선올림픽위원회 위원장 겸 체육상은 19일 저녁 영종도의 한 호텔에서 김영수 대회 조직위원장이 주최한 각국 올림픽위원회(NOC) 대표단의 공식 연회에 참석했다고 덧붙였다.

다. 공식 행사

- 특이사항 없음

라. 주요 기관 행위

- 특이사항 없음

마. 주요 구호 및 논조

- 특이사항 없음

- '사상사업에서 공백이 생기면 사람들의 머릿속에도 공백이 생겨 잡생각이 침습하게 된다'며 '사상사업을 사람들이 공기를 들이마시듯이 당의 사상을 부단히 체득할 수 있게 해야 한다'고 사상사업 강조(9.15, 중앙통신·노동신문)
- 北 보건대표단(단장 : 강하국 보건상), 9월 15일 세계보건기구 동남아시아지역 제32차 보건상회의와 제67차 총회 참가 후 귀환(9.15, 중앙통신·중앙방송)
- 제9차 평양 국제과학기술도서 전람회 개막식, 9월 16일 인민대학습당에서 진행(9.16, 중앙통신·중앙방송)
- 김일성사회주의청년동맹 제4차 초급일꾼대회 참가자들, 9월 16일 만경대 방문(9.16, 중앙방송)
- 조선노동당출판사, 김정일 저작들을 모은 '김정일선집' 증보판 제23권 출판(9.16, 중앙통신)
- 北 농업근로자동맹 대표단(단장: 리명길 위원장), 9월 16일 프랑스와 몽골 방문후 귀환(9.16, 중앙통신·중앙방송)
- 北, 9월 17일 최덕신 생일 100주년에 즈음하여 애국열사릉에 있는 묘에 화환 진정(9.17, 중앙통신·중앙방송)
- 전국 출판보도부문 기자·언론인들의 백두산지구 혁명전적지 답사행군대 출발모임, 9월 17일 보천보전투승리기념탑 앞에서 진행(9.17, 중앙통신)
- 제14차 평양 국제영화축전 개막식, 9월 17일 봉화예술극장에서 진행(9.17, 중앙통신)
- '세계 구급처치의 날'(9.13)에 즈음한 청소년적십자 구급처치활동 소개모임, 9월 17일 평안남도 평성시두무고급중학교에서 진행(9.17, 중앙통신)
- 전국 기상부문 및 해양부문 과학기술발표회(조선과학기술총연맹 중앙총 주최), 9월 17일-18일 평양에서 기상수문·해양부문 과학자·기술자 등 참석한 가운데 진행(9.18, 중앙통신·중앙방송)
- 北 위원회·성·중앙기관 일꾼(화학공업성·유원지총국 등) 정구경기, 9월 16일-18일 능라도에서 진행(9.18, 중앙통신)
- 김정은 黨 제1비서, 제4차 초급일꾼대회 참가자들에게 서한(청년들은 당의 선군혁명위업에 끝없이 충실한 전위투사가 되자) 전달(9.20, 중앙통신)
- '조선인민군대는 당과 수령을 받들고 조국과 인민을 위하는 데서도 최고이고 창조정신과 투쟁기풍에 있어서도 제일'이라며 '당의 결정지시에 따른 절대성과 무조건성 정신'을 선동하며 및 '창조정신과 투쟁기풍' 구현을 강조(9.19, 중앙통신·노동신문·중앙방송)
- 제4차 초급일꾼대회, 9.18~19 4.25문화회관에서 진행(9.19, 중앙방송)
- 제12차 전국 태권도 기술혁신경기, 9.16~23 평성경기장에서 진행(9.19, 중앙방송)
- 김정은 黨 제1비서, 청천강 계단식 발전소 건설 지원에서 모범을 보인 근로자들(평양과학기술대학 부원 최원숙 등)에게 감사 전달(9.20, 중앙방송)
- '「김정은 서한」에 제시된 과업 관철' 위한 청년전위들의 결의모임, 9월 21일 금수산태양궁전 광장에서 최용해(黨 비서)·전용남(청년동맹 위원장/보고) 및 청년동맹 일꾼 등 참가한 가운데 진행(9.21, 중앙방송·중앙통신)

4. 경제

가. 정책 동향

- 북한 관광총국장 "외국인 관광객 수 백배로 늘리고 싶다"(9/20, 교도통신)
 - 교도통신은 김도준 북한관광총국장이 20일 인터뷰를 통해 북한이 외국인 관광객을 유치하기 위해 "사증(비자) 절차의 간소화에 노력하고 있다"고 밝혔음을 전함.
 - 통신은 또 김 관광총국장이 평양에 관광대학을 설립하고 지방 대학에 관광학부를 만드는 등 북한 당국이 관련 인력을 양성하기 위한 노력도 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나. 주요 후속 조치

- 北, 건설 시공 감독 강화... '건설감독법' 제정(9/5, 민주조선; 9/16, 연합뉴스)
 - 연합뉴스는 민주조선이 9월5일 자 '법규 해설' 코너에서 건설감독법의 내용을 소개했다고 전함.
 - 민주조선 5일 자 따르면 건설감독법은 5개 장과 44개 조항으로 구성됐으며 "건설물의 안전성과 질을 담보하며 건설을 계획적으로 진행하도록 하는 데 이바지하는 것"을 목표로 함.
 - 이 법은 "(국가가) 건설 시공 감독을 건설 현장에서 시공의 전 과정과 건설주(건설을 주문한 개인이나 기관), 시공주(시공을 하는 건설업체) 검사원들의 질 검사 활동을 빠짐없이 감시통제하는 방법으로 하도록 해야 한다"며 당국에 면밀한 감독 의무를 부과한다고 민주조선은 설명함.
- 북한이 공개한 원산-금강산 관광특구 개발 청사진(9/21, 연합뉴스)
 - 북한 대외경제성 산하 원산지구개발총회사는 20일 오후 중국 다롄(大連)에서 세계한인무역협회(월드옥타) 회원 200여명을 대상으로 개최한 북한 투자설명회에서 원산·통천·금강산지구 등 크게 3개 지구로 구성된 대규모 관광벨트의 개발 방안을 소개했다고 연합뉴스가 21일 보도함.
 - 북한 측은 원산-금강산지구의 관광 인프라 개발이 북한의 계획대로 진행된다면

연간 100만명의 관광객을 유치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하면서, 이 지역에 지난해 말 개장한 마식령 스키장과 송도원 국제소년단야영소 리모델링 공사를 원산-금강산지구 개발의 대표적인 선도사업으로 꼽음.

- 또한 북한 측은 원산지구에 1만 2천명, 통천지구에 7천명, 금강산지구에 1만 4천명을 수용할 수 있는 숙박시설을 갖추는 사업 이외에 공항, 항만, 철도, 도로, 전력 등 각종 기반시설과 골프장, 카지노 등 위락시설에 대한 신축·확충 구상도 밝힘.

다. 경제 상황

- 특이사항 없음

라. 대외 경제관계

- 北 근로자 5명, UAE 공사현장서 사고사(9/17, 미국의 소리)
 - 중동 지역인 아랍에미리트(UAE)에 파견된 북한 근로자 5명이 건설작업을 하다가 사고로 사망했다고 미국의 소리(VOA)방송이 17일 밝힘.
 - 또한 방송은 현지 소식통의 전언이라며 당시 사고로 사망한 사람은 모두 북한 수도건설사업소의 근로자로 이들의 시신이 16일(현지시각) 쿠웨이트에서 북한으로 가는 고려항공편으로 운구됐다고 소개함.
- 中 훈춘-北 나선 통행량 증가세...하루 1천대 육박(9/17, 연변일보)
 - 연변일보는 두만강 유역의 북·중간 최대 교역·관광 루트인 지린성 훈춘(琿春)시 취안허(圈河) 통상구의 통행량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고 17일 보도함.
 - 또 신문은 지난 10일 취안허 통상구를 거쳐 북한을 오간 차량이 총 945대로, 해당 통상구가 문을 연 이래 1일 최다 차량 통관 기록을 경신했다고 전함.

- 북·중 신압록강대교, 10월 개통 예정(9/17, 중국신문사)
 - 중국신문사는 다음 달 중순 단둥에서 열리는 북·중 경제무역문화관광박람회의 내용과 준비 상황을 소개하는 기사에서 "신압록강대교가 올해 10월 개통할 예정이며 북·중 무역에서 단둥의 중요성이 한층 두드러질 것"이라고 전함.

- 황해남도, 해주잔디연구소(잔디의 육종과 재배 등 관련 연구실·실험실 등) 건설(9.14, 중앙방송·노동신문)
- 평안북도 사·군들(신의주시·영주군 등)의 '가을걷이와 낱알 탈기 준비 성과(트랙터 4천여대 등 수리·정비 완료)' 선전(9.14, 중앙방송·노동신문)
- 예성강발전소 건설 및 특장지구 탄광연합기업소 석탄생산 성과 선전(9.15, 중앙방송)
- 강원도 철원군(버섯공장 규모 10배 이상 확장)과 양강도 백암군(남새온실 15동 건설) 등 각지에서 "인민생활 향상을 위한 사업 전개" 선전(9.18, 중앙통신)
- 지난 2년간 922건설돌격대원들이 세포지구에서 '5만여 정보의 등판개간 완료 및 인공풀판 98%·자연풀판 77% 조성' 등 "세포지구 전변 성과" 선전(9.21, 중앙통신)

5. 사회

가. 공식 발언 및 주요 조치

- 특이사항 없음

나. 시장 관련

- 특이사항 없음

다. 국경통제 및 탈북 관련

- 탈북자 신동혁, 휴먼라이츠워치 인권상 수상(9/16, 연합뉴스)
 - 연합뉴스는 북한 정치범수용소에서 태어난 탈북자 신동혁 씨가 국제 인권단체 휴먼라이츠워치(HRW)에서 주는 '앨리슨 테스 포지스' 인권상을 수상했다고 전함.

- 신문은 또 HRW는 16일(현지시간) 신 씨와 함께 중앙아프리카공화국의 버나드 킨비 신부, 예멘의 여성운동가 아르와 오스만, 인도의 고통완화치료 전문의 M. R. 라자고팔 박사를 올해의 수상자로 선정했다고 발표했다고 덧붙였다.

라. 각종 단속 및 검열

- 北 관리 "공개처형, 주민 뜻 따라 극히 드물게 집행"(9/17, 연합뉴스; 민족통신)
 - 친북 성향 인터넷 매체 '민족통신'은 북한 최고재판소의 박수중(74) 원로참사의 인터뷰 기사를 통해 '공개처형제도'에 대해 밝힘.
 - 통신은 박 원로참사가 북한의 재판이 2심제인 데 대해서도 "서방처럼 재판이 길어지면 피고인들이 불필요하게 고생을 하기 때문에 2심을 원칙으로 하게 됐다"며 "(2심 이후에도) 피고에 대해 다시 한 번 재고해달라는 청원들이 들어오는 경우 이것을 심사해 재심할 수도 있다"고 설명했음을 전함.
 - 또한 통신은 북한의 대표적 정치범수용소로 알려진 요덕수용소에 대해서는 "함경남도에 요덕이라는 곳은 있지만, 요덕수용소라는 것은 존재 자체가 없다"고 덧붙이며 박 원로참사가 "판사, 변호사 등 조선 법조계에서 48년 동안 일해 온 김일성종합대학 법대 출신인 고참 인물"이며 "최고재판소 보좌관 겸 자문격인 참사로서 유엔 제네바 인권이사회에도 조선 인권문제로 종종 참석한 경력을 갖고 있다"고 소개함.

마. 사회 동향

- 유니세프 "北 5세 미만 아동 사망률 2년 연속 감소"(9/19, 미국의소리)
 - 미국의 소리(VOA)방송은 19일 보도를 통해 북한의 5세 미만 영유아 사망률이 2년 연속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유엔아동기금(유니세프) 보고서를 인용해 전함.
 - VOA는 유엔이 지난 16일 발표한 '2014 어린이 사망률 보고서'에서 지난해 북한에서 5세 미만 어린이 1천 명당 27명이 사망한 것으로 추정했음을 언급함.

- 北 김책공대, 교육용 안드로이드 미니PC 개발(9/19, 조선신보)
 - 조선신보는 북한 김책공업종합대학이 구글 안드로이드 운영체제(OS) 기반의 미니 PC(mini PC)를 교육용으로 개발해 시범 운용 중이라고 19일 보도함.
 - 또 신문은 미니 PC는 TV와 연결해 안드로이드 OS에서 구동하는 모든 애플리케이션을 TV화면에서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IT기기로 국내에서도 스마트TV 셋톱박스 용도로 일부 사용되고 있다고 덧붙임.

- 北 매체 "북한은 인권중시 사회" 주장 글 연재(9/19~21, 우리민족끼리)
 - 우리민족끼리는 지난 19일부터 "우리 공화국의 인권정책과 인권보장제도에 대해 연재로 소개한다"라며 '공화국은 인권중시의 참 사회'란 제목으로 매일 연재 글을 올림.
 - 특히 '노동권'을 언급하며 "공화국에서 노동자들은 노동보호사업을 생산에 앞세울 데 대한 국가적 원칙에 따라 철저히 안전하고 문화위생적인 노동조건하에서 노동의 권리를 마음껏 누린다"고 주장함.
 - 20일에는 '사회보장제도'를 소개하면서 "공화국에서는 사회보장자(생활보호대상자)를 우대하고 사회보장부문에 대한 투자를 계통적으로 늘이고 있다"고 주장함.
 - 21일에는 북한의 '무료의무교육' 제도를 소개하며 "공화국에서는 해당 국제인권법 규범의 요구를 훨씬 능가해 전인민적무료교육시책을 내놓고 모든 근로자에게 교육받을 권리를 충분히 보장해주고 있다"고 밝힘.

- 北 평양광명정보기술사, "컴퓨터 백신 개발"...백신 '실리악젠' (9/19, 노스코리아테크)

© 북한연구센터 제공

II. 동북아정세

1. 대북한 관련

가. 북핵 문제 및 6자회담

- 한미중 '동북아협력대화'...북핵·동북아안보 논의 (9/19, 연합뉴스)
 - 북핵 6자회담 당사국인 한·미·중 3국은 18일(현지시간) 북핵 문제와 관련, 향후 북한이 국제사회의 일원으로 동참할 수 있도록 경제개발 추진을 심도 있게 논의키로 함.
 - 회의 참가국들은 '한반도 정세와 비핵화' 세션에서 6자회담이 현단계에서 가장 유용하며 대체 불가능한 틀이라는 데 인식을 같이 하면서 북핵 문제 해결을 위한 새로운 아이디어를 모색하기로 했다고 전해짐.
 - 비공개로 진행된 이번 회의는 북한이 불참한 가운데 한·미·중·일 4개국 외교·국방 관계자와 학자들이 참석한 '반쪽 회의'였지만, 북핵 뿐만 아니라 동북아시아 긴장완화에 진지한 접근이 이뤄졌다는 점에서 주목됨.

나. 미·북 관계

- 미국 국무부 "북한, 억류자들을 정치적 볼모로 삼아" (9/16, 연합뉴스)
 - 미국 국무부는 15일(현지시간) 국무부 청사에서 열린 정례 브리핑에서 북한이 미국인 억류자 매튜 토드 밀러에게 6년의 노동교화형을 선고한 것에 대한 입장을 묻는 말에 북한이 미국인을 억류해 정치적 볼모(pawn)로 삼고 있다고 재차 지적한 것으로 전해짐.
 - 또한 "북한이 공식으로는 이들 억류자를 정치적 목적에 이용하지 않는다고 주장하지만, 정치적 아젠다를 추구하면서 이들 미국 시민권자를 볼모로 삼으려 한다는 게 점점 명백해지고 있다"고 강조했다, "미국 정부는 이들이 모두 석방돼 귀국해야 한다는 점을 명백하게 밝혔다"며 "선고와 관련된 보도를 봤지만, 이(기소 내용과 선고 결과)에 동의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 미국 정부가 북한이 억류자들을 정치적 볼모로 삼고 있다고 지적한 것은 북한의 이러한 일련의 행동이 미국의 고위급 특사 파견을 압박하기 위한 전략이라는

분석에 따른 것으로 풀이됨.

- "미국, 北에 대북특사 파견 협의 제의" <美방송> (9/17, 연합뉴스)
 - 미국의 소리(VOA) 방송은 17일, 미북관계에 정통한 소식통을 인용해 미국 정부가 북한에 억류된 3명의 미국인 문제를 논의하기 위한 특사 파견 협의를 제의했다고 전했다.
 - 이 소식통에 따르면, "미 국무부가 북한 당국에 억류 미국인 석방을 위한 대북 특사 파견 관련 협의를 제의했다"며 "미국이 대북 특사로 로버트 킹 북한인권특사만을 고집하지 않을 것이라면서 북한 당국에 어떤 급의 인사를 원하는지 알려달라고 문의했다"고 밝힌 것으로 전해짐.
 - 미국 국무부는 이러한 사실에 대한 VOA의 확인 요청에 대해 "해외에 있는 미국인들의 안녕과 안전보다 더 중요한 우선순위는 없다는 원칙에 따라 모든 수단을 다 강구할 것"이라는 원칙적인 입장을 표명함.

- 킹 특사 "북한 여행 삼가라"…빅터 차 "아예 금지해야" (9/18, 연합뉴스)
 - 로버트 킹 미국 국무부 인권특사는 17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포스트(WP)의 독자투고란에 "북한 여행은 임의 체포와 장기 구금 등 중대한 위험을 초래할 수 있다"며 "북한이 진정으로 관광객을 늘리고 싶다면 억류 중인 미국인 3명부터 석방시켜야 한다"고 촉구함.
 - 킹 특사는 "현재 구금된 억류자 3명은 북한에 의해 선전용 목적으로 이용되고 있다"며 "이들은 TV 앞으로 불러 나와 자신들을 석방할 고위급 특사를 보내달라고 촉구했다"고 지적했고, 이어 "북한이 진정으로 관광객을 늘리고 싶다면, 특히 미국인 관광객을 더 유치하려면 여행의 위험을 줄여야 한다"며 "이들 3명에 대해 사면을 베푸는 것이 그 출발점"이라고 강조함.
 - 미국 국무부는 이러한 사실에 대한 VOA의 확인 요청에 대해 "해외에 있는 미국인들의 안녕과 안전보다 더 중요한 우선순위는 없다는 원칙에 따라 모든 수단을 다 강구할 것"이라는 원칙적인 입장을 밝힌 것으로 전해짐.

다. 중·북 관계

- 申대사 "김정은 방중 실현될 것...중북 정상관계 유지" (9/17, 연합뉴스)
 - 추귀홍 주한 중국대사는 17일 오전 서울시내 한 호텔에서 열린 고려대 언론정보대학원 최고위과정 교우회 초청 조찬 간담회에서 최근 강석주 노동당 국제담당 비서의 유럽 순방 등 북한이 활발한 외교 활동을 펼치는 것에 대해 "북한은 정상 국가로서 조속히 국제 사회의 범위 내에 유입돼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북한과 유럽국가와의 (관계) 발전을 지지한다"고 말함.
 - 이어 추 대사는 김정은 북한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의 중국 방문 가능성에 대해 "중·북 간에는 줄곧 정상적인 양자 관계를 유지했고 이전에 양국 지도자간의 정상적 왕래가 있었다"면서 향후 김정은 위원장의 방중이 실현될 것이라고 밝힘.
 - 또한 그는 북핵 문제와 관련해 "한반도에 핵무기 출현을 반대한다는 중국의 입장은 분명하다"면서 "그렇기 때문에 중국은 6자회담을 조속히 추진함으로써 한반도의 비핵화를 실현해야 한다는 점을 여러 차례 강조했다"고 6자회담의 조기 재개를 거듭 희망한 것으로 전해짐.

- "中 훈춘-北 나선 통행량 증가세...하루 1천대 육박" (9/17, 연합뉴스)
 - 연변일보에 17일, 두만강 유역의 중·북간 최대 교역·관광 루트인 지린성 훈춘시 취안허 통상구의 통행량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고 보도했는데, 앞서 지난 10일 취안허 통상구를 거쳐 북한을 오간 차량이 총 945대로, 해당 통상구가 문을 연 이래 1일 최다 차량 통관 기록을 경신했다고 전한 바 있음.
 - 지난해 북한의 3차 핵실험 강행 이후 중국이 국제사회의 대북제재에 동참하면서 중국 대기업의 나선특구 진출은 주춤한 상황이지만 중소기업 투자와 무역 거래는 여전히 활발히 이뤄지고 있음.
 - 대북 소식통들은 나선특구에서 식당, 상점을 운영하거나 무역 업무를 위해 머무는 중국인이 평소 2천~3천명에 달하는 것으로 추산되는 가운데, 올해 안에 착공할 예정인 총연장 637m, 폭 23m, 왕복 4차선의 새 교량은 1937년 세워진 폭 6.6m짜리 기존 교량의 심한 정체를 해소해 양국 간 인원·물자 왕래를 늘릴 것으로 관측됨.

- "중·북 신압록강대교, 10월 개통 예정" <중관영매체> (9/18, 연합뉴스)
 - 중국 관영매체는 17일, 다음 달 중순 단둥에서 열리는 중·북 경제무역문화관광 박람회의 내용과 준비 상황을 소개하는 기사에서 북한 신의주와 중국 단둥(丹東)을 연결하는 국경교량인 신압록강대교가 올해 10월 개통할 예정이라고 보도함.
 - 이 프로젝트는 한화 3천700억 원에 달하는 공사비 전액을 중국이 부담해 현재 교량 본체 공사가 마무리 단계에 있으나, 북한이 신압록강대교가 연결되는 지점에 세관, 검역, 출입국 관리 등 통관시설과 접속도로를 착공조차 못해 국경교량으로 정상적인 기능을 할 수 없는 상황이어서 개통이 상당기간 지연될 것으로 전해짐.
 - 관련 매체들은 지난해 북한의 3차 핵실험 강행 이후 중·북 사이에 이상기류가 형성되면서 양국 간의 민감한 사안에 대한 보도를 극도로 자제해왔고, 이 사업과 관련해서는 관영 신화통신이 올해 1월 "연내에 완공돼 개통될 예정"이라고 보도한 이후 관련 소식을 일절 다루지 않았음.

라. 일·북 관계

- 아베 "북한, 납치조사 보고 안해...언제할지도 언급없어" (9/18, 연합뉴스)
 - NHK는 18일, 아베 총리가 기자들과 만나 "북한 측은 (조사 내용의 첫 보고 시점이) '여름이 끝날 때부터 가을이 시작할 때'라고 일본에 전했다"고 말했으나 현 단계에서는 아직 보고가 없다"고 말했다고 보도하며 진행 상황에 관해 북한이 아직 일본에 설명하지 않고 있다고 밝힘.
 - 아베 총리는 "일본으로서 북한 측이 확실하고 성실하게 이 문제를 마주하고 모든 것을 정직하게 일본에 전하도록 지금까지 취해 온 '대화과 압력'의 자세로 북한의 대응을 끝까지 지켜보겠다"고 강조한 것으로 전해짐.
 - 애초 북한은 일본인 납치 문제 재조사의 진행 상황에 관해 9월 초 또는 중순에 일본에 1차로 통보할 것으로 알려졌으나 지연돼 재조사에 따른 '대가'를 두고 북한과 일본이 이견을 보인다는 분석이 제기됨.

- "일본, 북한에 납치문제 조사단 파견 검토" <닛케이> (9/20, 연합뉴스)
 - 니혼게이자이신문(닛케이)은 20일, 일본 정부는 관계 성청(省廳)이 공동으로 구성된 조사단을 북한에 파견하기 위해 중국 베이징 대사관 경로나 유엔 총회를 이용해 북한과 당국자 접촉을 시도할 계획이라고 보도함.
 - 닛케이는 일본 정부가 조사단 직접 파견을 추진하는 것은 북한이 애초 이달 초·중순으로 예상됐던 조사 진행 상황에 관한 첫 보고 시기를 일방적으로 연기한 데 따른 대응으로 보고, 북한이 조사단을 파견하겠다는 일본의 구상을 수용할지는 명확하지 않다고 평가함.
 - 또한 이 보도에 따르면, 북한과 일본이 물밑 협의를 통해 이달 둘째 주에 첫 보고를 추진했으나 북한이 보고할 수 있다고 전해온 내용이 일본 측의 기대 수준에 훨씬 못 미치는 것이었다고 전함.

마. 러·북 관계

- '베일 속' 방북한 러시아 미디어 재벌 2세...왜 갔나 (9/15, 연합뉴스)
 - 지난 7일 평양에 도착해 6일간의 방북 일정을 소화한 '영국기업가협회' 대표 단장이 일간지 '인디펜던트' 등 다수의 영국 미디어를 소유한 러시아 재벌의 아들인 예브게니 레베데프가 알려져 이목이 집중됨.
 - 미국의 북한 전문 매체인 NK뉴스는 레베데프의 방북 소식을 전하며 "레베데프는 식당·호텔업에 관심이 있지만 그의 미디어 자산을 생각하면 이번 방문이 추가적인 미디어 사업 투자와 관련됐을 가능성도 있다"고 예측했고, 레베데프 측에 방북 목적이나 일정에 대해 들어보려 했지만 연락이 닿지 않았으며 영국기업가협회라는 단체는 공식 단체로 보이지는 않는다고 덧붙임.
 - 이와 관련, 우크라이나 사태가 장기화하면서 서방 측의 금융 제재로 어려움을 겪는 레베데프가(家)가 안정적인 사업 영역을 개척하기 위해 최근 경제개발에 힘을 쏟는 북한을 방문했을 수 있다는 분석이 제기됨.

바. 기타

- 유엔, 북한 정치범 수용소 폐지 등 권고 보고서 채택 (9/20, 연합뉴스)
 - 유엔 인권이사회는 19일(현지시간) 스위스 제네바 유엔본부에서 열린 제27차 회의에서 지난 5월 북한의 전반적 인권상황을 점검했던 '보편적 정례인권검토(UPR)' 보고서에 대한 북한의 최종 입장을 청취하고 이를 정식 채택함.
 - 268개 유엔 인권이사회 UPR 권고안 중 북한이 사실상 받아들인 것은 여성에 대한 차별과 폭력 퇴치, 어린이에 대한 폭력 방지 등과 관련한 113개이며, 국제협약 비준 등 4개 권고는 부분적으로만 수용한 것으로 전해짐.
 - 유엔 인권이사회는 이 보고서는 북한인권특별보고관의 북한 방문 허용, 사형제 폐지, 고문 방지 조치, 자유로운 인터넷 접근권 보장, 강제노역 금지와 국제노동기구(ILO) 가입, 고문방지협약 등 유엔 인권 관련 조약 가입 등 회원국들이 UPR에서 제기한 권고를 가감 없이 수록함.

2. 주변국 관련

가. 한·미 관계

- 김관진-라이스 회동 "美 통일대박론·드레스덴 구상지지" (9/16, 연합뉴스)
 - 청와대와 주미 한국대사관이 발표에 따르면, 수전 라이스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이 15일(현지시간) 오후 백악관에서 김관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과 회동한 자리에서 박근혜 대통령의 '통일대박론'과 드레스덴 구상을 적극적으로 지지한다는 입장을 표명함.
 - 이 자리에서 김 실장은 통일대박론과 드레스덴 구상, 통일준비위원회 등 우리의 대북정책 추진 동향을 설명한 뒤 한반도의 통일은 주변국의 이익에도 부합된다고 강조했고, 이에 라이스 보좌관은 우리 정부의 입장을 적극 지지한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짐.
 - 양측은 한미동맹이 그 어느 때보다 공고하다는 점에 공감하고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등 지난 4월 한-미 정상회담에서 논의된 주요 양자현안에 대한 후속협약이 원만히 진행되고 있다고 평가하며 북한의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한미 간 긴밀한

정책적 협력과 굳건한 연합방위태세 유지가 필요하다는데 의견을 같이함.

■ 한미, 전작권 연기 목표시기 조율 막판 진통 (9/18, 연합뉴스)

- 한국과 미국은 17~18일 서울에서 제6차 한미 통합국방협의체(KIDD) 회의를 열어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 전환시기 연기 목표시기를 협의했으나 일부 이견을 보인 것으로 전해짐.
- 국방부의 한 관계자는 이날 KIDD 회의 결과 설명을 통해 "전작권 전환에 대해서는 현재 다양한 방안을 검토하고 논의하는 단계라"면서 "오는 10월 개최될 한미안보협의회(SCM)에서 최종 결정과 합의가 이뤄지기까지는 아무것도 결정된 것이 없다"고 밝히며 "큰 이견도 있고 미세 조정이 필요한 것도 있다"고 말해 전작권 전환시기를 조율하는 데 진통을 겪고 있음을 시사함.
- 또한 이 관계자는 "(전작권 전환시기 합의 이후) 연합사의 기능을 어느 위치에, 어떻게, 어떤 규모로 유지할지에 대해 의견을 교환하고 있다"면서 "여러 가지 방안을 논의 중"이라고 전함.

나. 한·중 관계

■ 한중FTA 13차 협상 22일 베이징 개최 (9/17, 연합뉴스)

- 한중 자유무역협정(FTA)의 주요 쟁점을 조율하기 위한 제13차 협상이 오는 22일 중국 베이징에서 개최해 산업부 우태희 통상교섭실장이 우리 측 대표단과 참석하고, 중국 측에서는 왕서우원 상무부 부장조리(차관보급)를 수석대표로 하는 대표단이 협상 테이블에 앉을 예정임.
- 이번 협상에서 양국은 그동안의 협상 성과를 바탕으로 상품과 서비스, 투자, 규범 등 의제 전반에 걸쳐 시장 개방 수위를 논의하고 협정문에 담을 내용에 대해서도 협의할 것으로 알려짐.
- 지난 7월 국내에서 열린 12차 협상에서 양국은 서비스·투자 분야의 개방 방식을 놓고 원칙적 합의에 도달했지만 핵심 쟁점인 공산품·농산물 시장 개방 문제를 두고는 의견이 맞선 것으로 알려짐.

다. 한·일 관계

- 한일, 내년 수교 50주년 기념 전국적 행사 교류 추진 (9/18, 연합뉴스)
 - 한국과 일본 정부는 18일, 일본 도쿄도 외무성에서 열린 제16차 한일 문화외교국장 회의에서 양국 수석대표인 김동기 한국 외교부 문화외교국장파 신미 준 일본 외무성 국제문화교류심의관이 참석한 가운데 내년 수교 50주년을 기념하는 다양한 문화행사를 열기 위해 협력하는 데 의견을 일치함.
 - 한국은 2018년 평창 올림픽과 2020년 도쿄 올림픽의 효과를 극대화하도록 양국 조직위원회 간 정례협의 채널을 구축하자고 제안했고 일본은 이를 긍정적으로 검토하기로 했고, 청소년 교류 확대에도 양측은 뜻을 같이함.
 - 그러나 문화재 관련 현안에서는 양국이 견해 차이를 보였는데, 한국은 한일 국교정상화 협상 당시 일본 내 소송에서 드러난 일본 정부의 한국 문화재 목록 은폐 정황과 관련, 일본 정부가 문화재 목록을 공개해야 한다고 주장했고, 외무성 측은 일본 정부가 나서서 목록을 은폐했다는 것이 잘못 알려진 것이라고 맞선 것으로 전해짐.

- 한일 위안부문제 4차 협의…'日 해법제시 여부' 주목 (9/18, 연합뉴스)
 - 일본 도쿄도 외무성에서 한국과 일본이 일본군 위안부 문제 등을 논의하는 네 번째 국장급 협의회가 19일에 열려 이상덕 한국 외교부 동북아시아국장과 이하라 준이치 일본 외무성 아시아대양주국장이 각각 양국 대표로 참석함.
 - 양측은 약 3시간에 걸쳐 일본군 위안부 문제를 주로 논의하고 여타 현안에 관해서도 의견을 개진한 것으로 전해졌고, 이와 관련 이상덕 국장은 "위안부 문제 협의회가 진행 중에는 내용을 밝히지 않는다는 것에 대해 양측이 양해하고 있어 자세히 말할 수 없는 것을 이해해 달라"고 말함.
 - 또한 이 국장은 한국과 일본이 기본적으로 매달 협의를 열기로 합의했기 때문에 한 달 후 다시 국장급 협의를 재개하는 것을 염두에 두고 추후 일정을 결정하게 될 것이라고 덧붙임.

- 아베 "가을 만나길"...차대통령 "과거사 상처치유 선행" (9/19, 연합뉴스)
 - 청와대는 박근혜 대통령이 19일 오후 청와대를 방문한 모리 요시로 전 일본 총리로부터 '대한민국 박근혜 대통령 귀하, 내각 총리 대신 관저'라고 적힌 아베

총리의 친서와 선물을 전달받았다고 밝힘.

- 아베 총리는 친서에서 "과제가 있기에 대화를 거듭해 내년이 한일 양국에 있어 좋은 해가 되도록 상호 관계개선을 위해 노력해갔으면 한다"며 "오는 가을에 개최될 국제회의를 계기로 만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전함.
- 이에 박 대통령은 "과거 한일간 정상회담을 개최한 뒤 양국 관계가 잘 풀리기 보다 오히려 후퇴하는 상황도 있었음을 교훈으로 삼아 사전에 잘 준비를 해나갈 필요가 있다"고 말해 조건이 성숙돼야 함을 강조한 것으로 전해짐.

라. 미·중 관계

- "美, 괌 근해서 최대 규모 훈련...중국 염두" <NHK> (9/18, 연합뉴스)
 - NHK 보도에 따르면, 미군이 지난 15일부터 서태평양 괌 근해에서 병력 1만8천명이 참가하는 대규모 훈련 중이고, 이 훈련에서 미군은 항공모함 2척을 포함한 함정 19척, 항공기 200대 이상을 투입한다고 전해짐.
 - NHK는 23일까지 진행되는 이번 훈련이 그 내용상 아시아·태평양 지역에서의 군사적 영향력 확대를 노리는 중국을 염두에 둔 것이라고 분석했고, 특히 중국이 잠수함과 미사일 능력을 향상시킴으로써 미군의 접근을 막는 전략을 추진하고 있다는 점을 의식해 해상에서의 본격적인 전투를 상정한 것이 이번 훈련의 특징이라고 소개함.
 - 아울러 해상, 공중, 사이버, 우주공간을 망라하는 통합적인 군사력 운용능력을 높이는 것도 이번 훈련의 한 목적이라고 소개함.
- "미군-중국군 남중국해 갈등 이어질 것" (9/19, 연합뉴스)
 - 중국 군사 문제 전문가인 황둥 마카오국제군사학회 회장은 19일 홍콩정보와의 인터뷰에서 "남중국해가 중국과 미국 모두에 중대한 군사적 요충지여서 미국은 근접 정찰을, 중국은 이를 차단하는 활동을 멈출 수 없을 것"이라고 전망함.
 - 황 회장은 "중국군은 하이난 섬 부근에 항공모함 기항 시설과 핵잠수함 기지를 두고 있으며 군함의 수도 계속 늘리고 있다"며 "앞으로 해군과 해병대도 이 지역에 주둔할 가능성이 있다"고 설명함.
 - 또한 그는 "중국군은 잠수함에서 발사하는 탄도미사일 3기를 연구, 개발하고

있다"며 "앞으로 중국 잠수함이 하이난 섬 연해에서 미국 서부 해안을 공격할 능력을 갖출 수도 있을 것"이라고 내다봄.

마. 미·일 관계

- "일본, 주일미군기지 환경기준 강화 추진"<산케이> (9/17, 연합뉴스)
 - 산케이신문은 17일, 일본 정부가 오키나와 미군기지의 부담 경감 차원에서 미일 SOFA를 보완하는 '환경보충협정'을 체결하는 방안에 대해 다음 달 중 합의한다는 목표로 미국 정부와 최종 조정에 들어갈 방침이라고 보도함.
 - 산케이는 환경보충협정은 미군기지나 시설에서의 유해물질 관리와 관련한 기준을 강화하고, 미군기지 반환 전부터 관할 지방자치단체가 원활하게 출입조사를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핵심으로 담게 될 것이라고 소개함.
 - 이와 관련, 일본 정부가 미일 SOFA 보완을 추진하는데는 11월16일 치러지는 오키나와현 지사 선거에 출마키로 한 나카이마 히로카즈 현 지사를 밀어주는 의미도 내포되어 있는 것으로 전해짐.

- 아베 총리, 힐러리와 뉴욕서 공개대담 (9/21, 연합뉴스)
 - 요미우리신문의 21일 보도에 따르면, 24일(현지시간) 오전 약 10분가량 클린턴 전 국무장관은 유엔총회 참석 차 미국을 방문한 아베 총리를 인터뷰하는 형식으로 공개대담을 가질 계획이며 이는 인터넷으로 중계될 예정임.
 - 대담 내용은 여성의 인권이나 사회 진출 등 아베 정권이 성장 전략의 하나로 내건 여성의 활약이 주를 이룰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이에 앞서 클린턴 전 국무장관은 작년 아베 총리가 유엔 총회 연설에서 "여성이 빛나는 사회를 만들겠다"고 밝힌 데 대해 지지 편지를 보낸 바 있음.
 - 이와 관련해 요미우리신문은 이번 대담에 미국 민주당 차기 유력 대선주자인 클린턴 전 국무장관과의 관계 쌓기의 일환이라고 평가함.

바. 미·러 관계

- 푸틴 세르비아 방문 놓고 미·러 2차대전 역사 공방 (9/18, 연합뉴스)
 -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의 다음 달 세르비아 방문을 두고 세르비아 현지에서 미국과 러시아 관계자들이 "왜 오는지 모르겠다", "역사 공부를 제대로 해라"며 공방을 벌인 것으로 전해짐.
 - 마이클 커비 주세르비아 미국대사는 18일(현지시간) 일간지 베체르네와의 인터뷰에서 "2차 세계대전 당시 소련군이 베오그라드를 해방했다는 걸 명목으로 삼아 푸틴이 온다지만, 사실 우크라이나 제3군단이 해방했다"고 주장했고, 이에 러시아 국영철도회사의 블라디미르 야쿠닌 국장은 "커비 대사가 2차 세계대전 역사를 제대로 모른다"며 "누가 역사책을 좀 가져다줄 필요가 있다"고 지적함.
 - 앞서 푸틴 대통령은 베오그라드를 해방시킨 '붉은 군대'가 1944년 10월 19일 베오그라드에 진주해 해방한 날을 기리는 70주년 기념식에 참석하고자 베오그라드를 방문한다고 밝힌 바 있음.

- 러시아 전투기, 알래스카 영공 접근…美 대응 출격 (9/20, 연합뉴스)
 - 영국 BBC 방송 등 외신의 19일(현지시간) 보도에 따르면, 러시아 전투기 6대가 미국 알래스카주 영공에 접근해 미국이 대응 차원에서 전투기를 긴급 발진시킨 것으로 전해짐.
 - 러시아 전투기가 알래스카 영공에 접근한 것은 지난 17일로 핵무기를 탑재할 수 있는 전략폭격기 투폴레프(Tu-95)도 2대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고, 이날 미국 외 스웨덴 영공에도 러시아 수호이(Su-24) 전폭기 2대가 침범한 것으로 전해짐.
 - 이에 토머스 매키너니 전 미국 공군 참모총장은 "러시아는 공격적으로 핵준비태세 훈련을 시행하고 있다"며 "미국의 핵 억지력이 러시아의 핵무기력에 취약함을 보여주려는 것"이라고 분석함.

사. 중·일 관계

- 일본 재계 대표단 22일 중국 방문…사상 최대 규모 (9/20, 연합뉴스)
 - 니혼게이지신문(닛케이)은 20일, 대기업 총수 등 역대 최고 규모인 200명 이상의 방문단이 나선 일중경제협회가 22일부터 대규모로 중국을 방문한다고 보도함.
 - 이들은 베이징을 방문해 시진핑 중국 국가 주석, 리커창 중국 총리와 회담하기를 희망하고 있는 가운데, 중국 측에서 이를 응하게 되면 2009년 9월 이후 원자바오 당시 총리를 면담한 이후 5년 만에 일중경제협회 방문단과 중국 최고위급 인사의 회담이 될 전망이다.
 - 닷케이는 시 주석이 이번 달 들어 일본과의 관계 개선에 다소 긍정적인 태도를 보이고 11월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를 앞둔 상황에서 방문단이 중일 정상회담 실현을 위한 분위기 조성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전함.

아. 중·러 관계

- "중국-러시아 'GPS표준' 일체화 추진" (9/19, 연합뉴스)
 - 환구시보는 19일, 러시아 언론을 인용해 독자적인 위성위치확인시스템(GPS)을 개발 중인 중국과 러시아가 상대국 경내에 GPS 기지국을 설치하는 한편 수년 안에 두 개의 독자적인 'GPS 표준'을 일체화하는 추진하고 있다고 보도함.
 - 보도에 따르면, 중국은 2020년까지 GPS 위성을 30여 개로 늘려 전 세계적인 범위에서 GPS 서비스를 실시하는 베이더우(北斗) 프로젝트에 박차를 가하고 있고, 러시아는 우주공간에 쏘아 올린 29개의 위성을 이용해 글로나스(GLONASS)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음.
 - 또한 러시아와 중국은 미국이 운영 중인 GPS를 교란할 수 있는 기술도 공동으로 개발하는 등 현재 우주항공 분야에서의 협력을 계속 강화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자. 일·러 관계

- "일-러, 9월 하순 해상구조 합동훈련" <닛케이> (9/15, 연합뉴스)
 - 니혼게이자이신문(닛케이)이 15일, 일본 해상자위대와 러시아 해군이 이르면 이달 하순 블라디보스토크 앞바다에서 해상재해 시 수색 및 구조 관련 합동 훈련을 할 방침이라고 보도함.
 - 닛케이 보도에 따르면, 일본은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남부 크림반도를 일방적으로 병합한 지난 3월 이후 대(對)러 제재에 동참하면서 러시아와의 군사교류를 중단했지만, 수색 및 구조는 인도적 의미가 강하다는 판단 아래 훈련을 실시하기로 했다고 소개함.
 - 또한 훈련과는 별도로 해상자위대는 러시아 해군과의 간부 협의를 개최해 양측 간 방위교류를 계속한다는 방침을 확인할 전망이라고 전함.

© 국제전략연구센터 제공

Ⅲ. 북한 인권 동향

1. 북한 내부 실상 및 대내외 동향

- 북한, 억류 미국인 재판에 스웨덴 영사 참관 불허(9/15, 미국의 소리)
 - 미 국무부의 한 관리는 북한이 억류 미국인 중 한 명인 매튜 토드 밀러 씨에 대한 재판을 진행하면서 평양주재 스웨덴대사관 관계자의 방청을 허용하지 않았으며, 스웨덴대사관은 지난 6월 21일 이래로 밀러 씨를 면담하지 못했다고 밝힘.
 - 또한 스웨덴대사관이 북한 당국에 억류 미국인들에 대한 영사 접근을 거의 매일 요청하고 있지만 제프리 파울 씨는 6월20일, 케네스 배 씨는 8월11일 이후 방문하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 독 단체, 북 억류 미국인 석방 촉구 시위(9/15, 자유아시아방송)
 - 독일의 국제인권단체 '국제인권사회(ISHR: International Society for Human Rights)'는 오는 25일 베를린 주재 북한 대사관 앞에서 북한의 인권 실태를 고발하는 시위를 계획하고 있음.
 - 이 단체의 관계자는 15일 특히 북한에 억류된 한국계 미국인 케네스 배 씨에 대한 관심을 촉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 북한, 韓서 송금해온 돈 차단에 혈안... '화교'도 단속(9/15, 데일리NK)
 - 북한이 탈북자 가족들에게 한국에서 송금해오는 돈을 차단하기 위해 그동안 탈북자 가족과 '송금 브로커'들만 집중 감시·검열을 진행해왔지만, 최근에는 '화교'들까지 단속 범위를 확대하고 있음.
 - 북한 당국이 감시 대상을 화교들까지 확대한 것은 매우 이례적으로 화교들이 새로운 '송금 브로커' 역할을 한다고 판단, 더 이상 한국에서 보내오는 돈이 주민들에게 들어가지 못하도록 철저히 차단하겠다는 당국의 강한 의지를 드러낸 것으로 풀이됨.
 - 소식통은 "처음에는 탈북자 가족을 위주로 감시하고 검열, 처벌을 했다면 지금은 송금 전달자까지도 처벌하는 등 범위가 넓어졌다"고 설명했다.
 - 보위부의 한국에서 보내온 돈에 대한 검열이 지속되자 주민들 사이에서는 "보위부 사람치고 한국에서 보내온 돈을 받지 않은 사람이 별로 없을 것"이라며

"검열하려면 보위원들부터 검열 받아야 되는 것 아니냐"는 반응을 보이고 있다고 소식통은 전했다.

- 일각에서는 밀수와 탈북 방조 등으로 뇌물을 받아오던 국경지역 일부 보위원들이 최근 국경통제가 강화되면서 뇌물 루트가 막히자, 경제적으로 안정적인 화교들의 송금작업까지 단속해 뇌물을 받아내려는 것 아니냐는 관측도 제기되었음.

■ 북, 올해 신병부터 군 복무기간 연장(9/16, 자유아시아방송)

- 북한당국이 금년 초모생(신입병사)부터 군복무기간을 남자는 3년, 여자는 2년씩 각각 더 연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 신의주의 한 간부 소식통은 "이는 남자든 여자든 일반병과의 경우이고 기계화부대, 로켓부대(미사일 부대)나 기술병과의 경우는 일반병사 보다 2~3년 정도 더 복무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 금년 초모생부터 이 같은 군 복무기간의 연장 조치가 적용된다고 하지만 현재 복무중인 병사들도 제대가 미뤄지면서 이미 연장복무가 시작되었다는 정황이 확인되고 있음.
- 최근 사사여행으로 중국에 나온 평양의 한 주민 소식통은 "군 복무중인 조카가 10년의 의무복무기간을 다 채우고도 제대를 못 하다가 군복무 12년을 마친 최근에야 제대를 했다"고 증언했음.

■ 미국 국무부 "북한, 억류자들을 정치적 볼모로 삼아"(9/16, 연합뉴스)

- 마리 하프 미 국무부 부대변인은 15일(현지시간) 정례 브리핑에서 북한이 매튜 토드 밀러에게 6년의 노동교화형을 선고한데 대해 북한이 미국인을 억류해 정치적 '볼모(pawn)'로 삼고 있다고 지적했다.
- 하프 부대변인은 "북한은 공식적으로는 이들 억류자를 정치적 목적에 이용하지 않는다고 주장하지만, 북한이 정치적 어젠다를 추구하면서 이들 미국 시민권자를 볼모로 삼으려 한다는 게 점점 명백해지고 있다"고 강조하며 이들의 석방을 재차 요구했음.
- 하프 부대변인은 국무부 브리핑 이후 외신기자클럽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도 미국인이 가혹한 선고를 받았음을 강조했으며, 북한의 인권 상황이 믿을 수 없을 정도로 열악하다고 강조했다.

- 이어 16일 개막되는 유엔총회를 계기로 "(북한 인권 상황에) 변화를 유도할 가능성을 모색하기 위해 다른 나라들의 뜻을 모으려 한다"고 전하고 유엔총회에 참석하는 리수용 북한 외무상의 북한인권 고위급회의 초청 여부에 대해서는 "누가 초대될지 모른다"고 답했음.

■ 북한인 근로자 5명, UAE 공사 현장 사고로 사망(9/17, 미국의 소리)

- 아랍에미리트연합에서 발행되는 영어 신문 '걸프 투데이'는 지난 3일 알 아인 시 알 바스라 지역의 전력망 확충 공사현장에서 시멘트 벽이 무너져 5명의 아시아인 근로자가 사망했다고 지난 6일 보도했으며, 현지 소식통은 16일 'VOA'에 사고로 인한 사망자가 모두 북한 수도건설사 소속 북한 근로자들이라고 밝힘.
- 이 사고로 무너진 벽 아래 깔려있던 근로자들 가운데 3명은 현장에서 사망하고 2명은 알 아인 병원 중환자실로 옮겨졌지만 결국 사망했음.
- 소식통은 사망한 북한 근로자들의 시신은 16일 쿠웨이트에서 북한으로 가는 고려항공으로 운구됐다고 전함.
- 아랍에미리트에 파견돼 주로 공사 현장에서 일하는 북한 근로자의 수는 1천여 명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 유엔 '북한 인구 10명 중 4명 영양 부족, 아시아 최악'(9/17, 미국의 소리)

- 유엔 식량농업기구(FAO)와 세계식량계획(WFP), 국제농업개발기금(IFAD)은 16일 발표한 보고서 'State of Food Insecurity in the World 2014'에서 2012년에서 2014년 기간 중 북한에서 영양 부족을 겪은 주민 수가 930만 명에 달했다고 밝혔음.
- 이는 전체 인구의 37.5% 수준으로, 북한에서 영양 부족을 겪는 주민 수는 20여 년 전에 비해 2배 가까이 증가했음.
- 보고서에 따르면 이 수치는 1990년대 초반 480만 명에서 2000년대 초반 870만 명, 2000년 대 후반 1천만 명까지 증가했다가 2012년부터 2014년 사이 930만 명으로 약간 감소했음.
- 영양실조 비율은 1990년에서 1992년 23.3%에서 2000년에서 2002년 37.7%로 급등한 데 이어 2009년에서 2011년 41.7%까지 치솟았다가 최근 37.5%로 감소했는데, 이러한 북한의 영양실조 비율은 아시아 38개국 중 가장 높은 것이며 이 추세가 계속되면 북한은 2015년까지 새천년개발목표(MDGs)

달성이 어려울 것으로 보임.

- 세계적으로 북한 보다 전체 인구 대비 영양실조 비율이 높은 나라는 전체 조사대상국 115개 나라 가운데 단지 2개 나라로, 48.3%인 아프리카 잠비아와 51.8%인 아이티뿐임.

■ "국무부, 북한에 대북 특사 관련 논의 제의…킹 특사 고집 인해"(9/17, 미국의 소리)

- 북미관계에 정통한 소식통에 따르면, 미국 정부가 억류 미국인 석방을 위한 대북 특사 선정을 놓고 북한 당국의 의사를 타진했으며 로버트 킹 북한인권특사만을 고집하지 않겠다는 입장인 것으로 전해졌음.
- 이 소식통은 국무부가 특사 후보로 모든 가능성을 열어 놓고 있다며 북한에 어떤 급의 인사를 원하는지, 조속히 이 문제를 논의하자는 입장을 북한 측에 전달했다고 말했음.
- 이에 대해 북한 측은 특사 후보로 특정 인물을 거론하지는 않은 채 억류 미국인들의 "불법 행위"를 법에 따라 처리할 것이라는 원칙만 미국 측에 전한 것으로 보임.
- 사실관계 확인을 요청한 'VOA'의 질문에 쟌 사키 국무부 대변인의 지난 2일 발언을 인용하며, 해외에 나가 있는 미국인들의 안녕과 안전보다 더 중요한 우선순위는 없다는 원칙 아래 모든 수단을 다 강구할 것이라면서도, 미국인 귀환을 위한 미국 정부의 모든 노력을 공개하지는 않을 것이라는 입장도 거듭 확인했음.

■ 북한, '北인권 운동가 김영환' 등 실명 거론하며 협박(9/17, 데일리NK)

- 북한의 대남기구인 조국평화통일위원회(조평통) 사이트 '우리민족끼리'는 17일 '상전과 인간추물들의 가련한 광대극'이라는 제목의 글에서 하태경 새누리당 의원, 김영환 북한민주화네트워크 연구위원 등 남한 내 북한인권 활동가들의 실명을 거론하며 이들을 '배신자'라고 비난했음.
- 매체는 이들에 대해 "신념과 의지는 고사하고 인간의 양심이나 도덕 의리도 모르는 범죄자, 배신자, 인간추물들이 모략광대극의 주역배우로 나서서 그 누구의 인권상황이요, 인권법 제정이요, 뭐요 하는 것이야말로 웃을 일이 아닐 수 없다"고 비꼬았음.
- 또한 16일(현지시간) 개막하는 유엔총회에서 북한인권 문제가 이슈화될 것으로

예상되고, 우리 정부와 새누리당에서 북한인권법을 제정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자 이에 대해서도 강하게 반발했음.

- 매체는 "이자들은 '북의 인권문제에 세계의 눈이 몰리고 있다'느니, '절호의 기회가 될 것'이니 뭐니 하면서 '모처럼 마련된 호기'를 놓치지 말고 '북 인권법'을 조속히 처리해야 한다고 악청을 돋우고 있다"고 강변했음.

■ 킹 특사 "북한 여행 삼가라"...빅터 차 "아예 금지해야"(9/18, 연합뉴스)

- 북한의 미국인 3명 억류사태와 관련해 미국 워싱턴 조야의 대북 비판 수위가 높아지고 있음.
- 로버트 킹 미 국무부 인권특사는 17일(현지시간) 워싱턴포스트(WP)의 독자투고란에 글을 올려 "북한이 진정으로 관광객을 늘리고 싶다면 억류 중인 미국인 3명부터 석방시켜야 한다"고 촉구했음.
- 킹 특사의 이례적인 공개 발언은 북·미간 최근 진행 중인 석방 협상이 순탄치 않게 돌아가고 있음을 보여주는 신호로 풀이되고 있음.
- 빅터 차 미국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 한국석좌는 이날 연구소 홈페이지에 글을 올려 재무부가 발행하는 여행거래 제한 조치를 통해 "북한이 미국인 억류자 3명을 풀어주기 전까지 미국 국민들의 북한 여행을 금지시켜야 한다"고 주장했음.
- 또한 "오바마 행정부는 통상적으로 대응할게 아니라 '무고한 미국인들을 부당하게 재판하고 수용소캠프에 보내는 것은 용납할 수 없다'는 고위급 성명을 내놓아야 한다"고 촉구했음.

■ '북한 주민, 외부 정보 접근 늘어...USB도 이용'(9/18, 미국의 소리)

- 프리덤 하우스는 지난 5월 발간한 '2014년 세계 언론자유 보고서'에서 북한 언론자유 지수를 97점으로 세계 최악의 언론자유 탄압국이라고 비판한데 이어, 최근 구체적인 점수 환산과 북한의 언론 상황을 추가로 발표했다.
- 프리덤 하우스는 언론에 대한 법적, 정치적, 경제적 환경을 각각 30점, 40점, 30점 만점으로 환산하고 점수가 높을수록 언론 탄압이 심각한 가운데, 북한은 각각 30점, 38점, 29점, 총 97점을 받아 조사 대상 197개 나라 가운데 최하위를 기록했다고 밝힘.
- 보고서는 지도자 김정온이 권력을 계속 공고화하면서 북한의 매체환경은 여전히

세계 최악으로 남아있다고 지적했음.

- 그러면서 북한의 헌법은 이론적으로는 표현의 자유를 보장하고 있지만 유일 정당인 조선노동당이 모든 매체를 검열하며 외부 정보를 제한하고 있다고 밝혔음.
- 그러나 이런 엄격한 규제와 처벌에도 불구하고 외국 라디오 방송과 민간단체들이 북한으로 계속 외부 정보를 보내면서 최근 몇 년 간 북한 주민들의 외부 정보 접근환경이 계속 개선되고 있다고 밝힘.
- 특히 중국에서 밀반입되는 USB를 통해 북한 내 외부 정보 흐름이 더 개선되고 있다고 밝힘.

■ 킹 특사 “北, 미국 특사 파견 제의 거부”(9/18, 연합뉴스)

- 로버트 킹 미국 국무부 인권 특사는 17일(현지시간) AP통신에 북한의 미국인 3명 억류사태와 관련해 북한이 억류 미국인 석방을 위한 미국의 고위급 특사 파견 제의를 거부했다고 밝혔음.
- 킹 특사의 발언은 미 국무부가 이날 버락 오바마 행정부가 북한에 억류된 미국인 3명의 석방을 위한 특사 파견 협의를 제안했다는 'VOA' 보도에 대해 "외국에 있는 미국인들의 안녕과 안전보다 더 중요한 우선순위는 없다는 원칙에 따라 모든 수단을 강구할 것"이라고 원론적인 입장을 밝힌 가운데 나온 것임.
- 킹 특사는 미국이 제안한 '고위급 특사'가 누구인지는 언급하지 않았음.
- 그러나 스콧 스나이더 미국외교협회(CFR) 연구원은 미국 정부가 글린 데이비스 국무부 대북정책 특별대표를 보내려 제의했다는 이야기를 들었다고 전했다.

■ 유니세프 '북한 5살 미만 사망률 2년 연속 감소'(9/19, 미국의 소리)

- 유니세프가 16일 발표한 '2014 어린이 사망률 보고서(Levels & Trends in Child Mortality Report 2014)'에 따르면, 북한의 영유아 사망률이 2년 연속 감소했으며, 5세 미만 사망률은 2000년에 비해 절반 넘게 감소함.
- 북한의 5살 미만 어린이 사망은 지난 2011년 1천 명 당 33명에서 2012년에는 29명, 이어 2013년에는 27명으로 계속 감소세를 나타냈음.
- 북한의 2013년 5살 미만 사망률은 전세계 평균인 1천 명 당 46명 보다 크게 낮은 것임.
- 또한 영아 사망률은 2011년 1천 명 당 26명에서 2012년 23명, 2013년 22명으

로 감소했으며, 신생아 사망률도 지난 2011년 1천 명 당 18명에서 2012년 16명, 2013년 15명으로 2년 연속 감소했음.

■ FAO "북 식량분배 불균형 해소 시급"(9/19, 자유아시아방송)

- '2014 세계식량 불안정 상황(State of Food Insecurity in the World)' 보고서 작성에 참여한 식량농업기구(FAO)의 전문가는 북한 식량부족 해결을 위해서는 북한 당국이 성과급 제도를 비롯한 농업 생산성 향상 정책을 시행하고 식량 분배의 불균형을 해소하는데 적극 나서야 한다고 권유했음.
- 식량농업기구의 피에로 콘포르티 분석관은 북한의 굶주리는 인구가 20년 전보다 배 이상으로 늘었다면서 국제사회가 내년까지 달성하려고 하는 굶주림 퇴치 목표와는 반대 방향으로 멀어지고 있다고 19일 지적했음.
- 콘포르티 분석관은 굶주리는 북한 주민의 수가 가한 것은 영양분 섭취의 불균형이 커졌기 때문이라고 설명하면서 영양실조로 분류되는 수를 줄이기 위해서는 더 많은 농산물을 생산할 수 있는 농업 정책의 도입과 영양상태가 나쁜 주민을 배려하는 식량 분배 정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 北 억류 미국인 밀러 판결내용 공개...“美가 시비중상”(9/20, 연합뉴스)

- 북한이 최근 진행된 매튜 토드 밀러의 재판 내용을 공개하며 미국인을 억류해 정치적 볼모로 삼고 있다는 미국 정부의 비판을 '법적 정당성에 대한 시비중상'이라고 반박했음.
- 조선중앙통신은 20일 '존엄높은 우리 공화국을 감히 걸고드는 자들은 그가 누구이든 징벌을 면치 못한다'라는 제목의 '상보'를 발표하고 뒤늦게 밀러의 재판 과정과 내용을 상세히 공개한 배경에 대해 설명했다.
- 북한은 미 행정부가 인권문제를 들며 미국인의 범죄를 덮으려 하고 있어 미국인범죄사건의 진상을 공개한다면 상보를 발표했으며, 이는 최근 미국 국무부가 밀러의 판결에 대해 "미국 시민권자를 볼모로 삼는 것"이라며 잇따라 강하게 비난한 것에 따른 것으로 보임.
- 상보는 밀러가 북한의 인권실태를 조사할 목적으로 의도적으로 수감되기로 마음먹고 평양항공 통행검사소의 입국수속 과정에서 관광사증을 찢으며 "정치적 망명을 요구한다"고 난동을 부렸다고 이 '형법 제64조 간첩죄'에 해당하는 것이라고 밝혔음.

- 또한 "자신의 몸값을 올려야 한다는 생각에 '미국 정부의 자료를 빼내려고 시도하다 적발돼 피난처를 찾고 있으며 스노우덴처럼 자료를 공개하려고 계획하고 있다'는 내용을 쓴 수첩을 사전에 준비했다"며 망명을 원하는 사람인 것처럼 가장했다고 주장했다.
- 미국, 북한 인신매매 방지 노력 부족 국가 재지정(9/20, 미국의 소리)
 - 버락 오바마 대통령은 18일 존 케리 국무장관에게 보낸 메모를 통해 인신매매 희생자보호법에 따라 연방정부의 자금 지원을 금지하는 대상국가에 북한을 포함시켰음.
 - 이에 따라 북한은 적도 기니, 이란, 러시아, 베네수엘라, 짐바브웨 등과 함께 연방정부의 2015 회계연도 특정자금 지원 금지 대상에 포함됐음.
 - 오바마 대통령은 이들 나라가 인신매매 피해를 막기 위한 최소한의 기준을 충족하거나 이를 위한 상당한 노력을 기울일 때까지 특정자금을 지원하지 말도록 지시했음.
- 北 매체 "북한은 인권중시 사회" 주장 글 시흥째 연재(9/21, 연합뉴스)
 - 우리민족끼리는 지난 19일부터 "우리 공화국의 인권정책과 인권보장제도에 대해 연재로 소개한다"라며 '공화국은 인권중시의 참 사회'란 제목으로 매일 북한 인권상황을 미화하는 글을 잇달아 내고 있음.
 - 이 매체는 21일 북한의 '무료의무교육' 제도를 소개하며 "공화국에서는 해당 국제인권법 규범의 요구를 훨씬 능가해 전인민적무료교육시책을 내놓고 모든 근로자에게 교육받을 권리를 충분히 보장해주고 있다"고 밝히며 "남조선 대학생들은 대학등록금 때문에 매일 매시각 고통 속에 시들고 있다"라고 비난했음.
 - 20일에는 '사회보장제도'를 소개하면서 "공화국에서는 사회보장자 (생활보호대상자)를 우대하고 사회보장부문에 대한 투자를 계통적으로 늘이고 있다"고 주장했다.
 - 19일에는 '노동권'을 언급하며 "공화국에서 노동자들은 노동보호사업을 생산에 앞세울 데 대한 국가적 원칙에 따라 철저히 안전하고 문화위생적인 노동조건하에서 노동의 권리를 마음껏 누린다"고 주장했다.

2. 북한 인권

- 與, 북한인권법 처리 촉구...“野 이율배반적”(9/16, 연합뉴스)
 - 새누리당은 16일 개막한 유엔총회에서 북한 인권 문제가 주요 의제로 다뤄지는 것과 관련, 국회에 계류된 북한인권법 제정안의 조속한 처리를 야당에 촉구했음.
 - 주호영 정책위의장은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국제사회에서 논의하고 있는 북한인권에 대해 한국에서는 북한인권법이 수년째 국회서 계류된 채 논의조차 제대로 안 되고 있음을 비판했음.
 - 김재원 원내 수석부대표는 "북한인권법을 담당하는 외교통일위의 여당의원 수가 (재적의) 5분의 3을 넘었다"면서 "이에 따라 현행 국회선진화법에 규정된 '패스트 트랙(신속안건처리제)'에 즉각 걸어서 최대한 신속히 북한인권법을 본회의에서 처리하도록 조치하겠다"고 말했음.

- 내주 '北인권 장관급회의', 케리 美국무 주재 전망(9/16, 연합뉴스)
 - 유엔총회 기간인 다음 주 뉴욕에서 열릴 것으로 알려진 북한 인권 관련 장관급 회의는 사실상 미국의 주도로 추진되고 있으며, 존 케리 미국 국무장관이 이번 회의를 직접 주재할 가능성이 큰 것으로 전해졌음.
 - 정부의 한 관계자는 16일 "미국이 일종의 생각이 비슷한 국가들을 모아서 이번 회의를 개최하는 것"이며 "관심을 공유하는 국가들이 참여한다"고 전했다.
 - 이번 회의에는 케리 장관 이외에 윤병세 외교부 장관과 기시다 후미오(岸田文雄) 일본 외무상, 유럽 일부 국가의 장관 등이 참석하는 방안이 협의되는 것으로 전해졌음.
 - 또한 마이클 커비 전 유엔 북한인권조사위원회(COD) 위원장의 출신국인 호주의 참석도 거론되고 있고, 참석 규모는 5~6개국 안팎이 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음.
 - 참가국들은 현재 구체적인 일정과 의제 등을 논의하고 있음.

- “통일 대비 北 인권침해 자료 수집·관리해야”<세미나>(9/16, 연합뉴스)
 - 김웅기 북한인권정보센터 소장은 16일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통일독일의 사법적 청산과 사회통합이 한반도에 주는 교훈'을 주제로 열리는 세미나의 발제문에서 통일 이후 북한의 인권범죄를 청산하기 위해 남측에서 북한의

- 인권침해 상황 자료를 체계적으로 수집·관리해야 한다는 주장을 제기했음.
- 그는 청산 대상 범죄는 국제형사재판소의 규정을 기준으로 결정할 수 있다며 고문·강간 등 구금시설 내 인권침해, 공개·비밀처형·반인도적 사형 등 수사·사법기관에 의한 인권침해, 휴전 이후 납북자 억류, 종교박해 등을 청산 대상으로 꼽았음.
 - 이어 청산을 위해 진실 규명이 선행돼야 하는 만큼 탈북자 등 피해자로부터 이같은 범죄행위와 관련된 증언을 수집해 분석·보관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 새누리당 "北, 인권백서…유엔결의안 의식한 꼼수"(9/16, 국제뉴스)
- 새누리당은 대변인 논평을 통해 북한이 인권백서를 낸데 대해 "북한은 갖 쓰고 구두 신기 식으로 인민들의 인권이 충분히 보장 돼 있다는 인권보고서를 내놓았다"며 "즉 그들 나름의 '인권백서'인 셈"이라고 강조했다.
 - 또한 "이 보고서를 서둘러 발표한 것도 오늘부터 열리는 유엔 총회에서 참혹한 북한 인권 상황에 대한 국제사회의 비판을 모면하고 인권 관련 유엔결의안 채택을 막아 보려는 노림수"라고 꼬집었음.
 - "사탕발림 같은 '인권백서'로 진실을 덮으려 하지 말고 이제부터라도 유엔의 그 어떤 결정이라도 수용하면서 자신들의 인권개선에 크게 눈을 돌려야 할 때"라고 지적했다.
- "유엔 북 인권 고위급 회의 23일 예정"(9/16, 자유아시아방송)
- 16일 미국 뉴욕에서 유엔 총회가 개막된 가운데 미국과 한국 정부가 오는 23일 북한 인권문제를 논의할 고위급 회의를 개최한다고 이 문제에 정통한 인권 단체 관계자가 전했다.
 - 이 관계자는 이번 고위급 회의의 목적은 북한의 인권 위기에 주목하고 유럽연합과 일본이 현재 초안을 작성 중인 북한인권결의에 대해 미국이나 한국 뿐 아니라 국제사회의 폭넓은 지지를 확보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 유엔 북한인권사무소 서울 설치 본격 추진(9/17, 연합뉴스)
- 서울시는 유엔 북한인권사무소를 서울에 설치하는 방안이 본격적으로 추진된다고 17일 밝혔다.

- 시는 전날 외교부로부터 유엔 북한인권사무소 서울 설치 관련 공식 협조요청이 오며 따라 사무소를 종로구 서울글로벌센터빌딩에 유치하기 위한 실무협약에 착수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 실무 협약에는 서울시 외에 외교부, 유엔 인권최고대표사무소(OHCHR), 제네바 한국 대표부 등이 참여함.
- 北 관리 "공개처형, 주민 뜻 따라 극히 드물게 집행"(9/17, 연합뉴스)
- 북한의 사법기구 관리가 공개처형 제도의 존재를 시인하면서 주민의 뜻에 따라 아주 제한적으로 이뤄진다고 강조해 주목됨.
 - 북한 최고재판소의 박수종(74) 원로참사는 17일 재미동포가 운영하는 웹사이트 '민족통신'에 실린 인터뷰 기사에서 '공개처형 제도가 있는가'라는 질문에 "있다"고 답했음.
 - 그는 "이런 경우(공개처형)는 극히 드물지만, 피고인이 아주 악질적인 사람으로, 주변 인민들이 청원하면 심사해 집행한다"고 밝혔으며, "함경도에서 한 할머니가 잔인하게 살해된 경우가 있어 그 지역 인민들이 들고일어나 공개처형해야 한다고 주장해 그렇게 집행된 적이 있었다"고 소개했음.
 - 박 원로참사의 발언은 공개처형의 존재를 시인하면서 주민의 뜻에 따라 예외적으로 집행된다는 점을 내세워 적극적으로 이를 옹호하려는 것으로 풀이됨.
 - 박 원로참사는 북한의 재판이 2심제인 데 대해서도 "서방처럼 재판이 길어지면 피고인들이 불필요하게 고생을 하기 때문에 2심을 원칙으로 하게 됐다"며 "(2심 이후에도) 피고에 대해 다시 한번 재고해달라는 청원들이 들어오는 경우 이것을 심사해 재심할 수도 있다"고 설명했다.
 - 또 북한에서 형벌은 범죄자에 대한 '사회적 교양'을 목표로 하지만 "(국가전복, 고의살인, 마약 밀수 등) 악질적인 범죄자들은 무기형을 포함해 사형도 한다"고 밝혔음.
 - 또한 대표적 정치범수용소로 알려진 요덕수용소에 대해서는 "함경남도에 요덕이라는 곳은 있지만, 요덕수용소라는 것은 존재 자체가 없다"고 덧붙였음.
 - 민족통신은 박 원로참사가 "판사, 변호사 등 조선 법조계에서 48년 동안 일해온 김일성종합대학 법대 출신인 고참 인물"이며 "최고재판소 보좌관 겸 자문격인 참사로서 유엔 제네바 인권이사회에도 조선 인권문제로 종종 참석한 경력을

갖고 있다"고 소개했음.

- 유엔 인권이사회서 북한인권 우려 제기(9/17, 미국의 소리)
 - 제27차 유엔 인권이사회에서 또 다시 북한인권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자 북한은 즉각 반발했음.
 - 미국 대표는 16일 열린 토론회에서 북한의 개탄스런 인권 상황에 대해 크게 우려하고 있다고 밝혔으며, 영국 대표도 유엔 북한인권 조사위원회 COI 보고서에서 밝혀진 북한의 인권 상황에 크게 우려하고 있으며 유엔 인권이사회가 북한인권 개선에 계속 초점을 맞춰야 한다고 강조했다.
 - 호주는 북한 정부에 반인도 범죄에 대한 조사 등 COI 권고사항을 즉각 전면적으로 이행하라고 촉구함.
 - 체코공화국 역시 북한에 COI 권고사항을 이행하라고 촉구하면서, 아울러 모든 정치범 수용소를 폐쇄하고 모든 정치범들을 무조건 즉각 석방하라고 요구했음.
 - 일본은 북한에 COI 보고서와 유엔 인권이사회 결의안을 수용하라고 요구하고 동시에 국제사회에는 구체적인 행동을 촉구했으며, 북한에 의한 일본인 납치가 일본만의 문제가 아니라 국제사회 전체의 우려를 불러일으키는 근본적인 인권 침해 문제라고 지적했음.
 - 북한은 이날 토론회에서 미국의 인권 문제를 거론했는데, 최근 미 중서부 미주리 주 퍼거슨 시에서 10대 흑인 소년이 경찰관의 총에 맞아 사망한 사건은 미국의 위선적인 성격과 미국이 전 세계 인권 침해의 주모자라는 점을 잘 보여준다고 주장하면서 국제사회가 이 같은 미국의 대규모 인권 침해에 대해 조사해야 한다고 지적했음.

- 유엔, 북한 정치범 수용소 폐지 등 권고 보고서 채택(9/20, 연합뉴스)
 - 유엔 인권이사회는 19일(현지시간) 정치범수용소 폐지, 공개처형 금지 등 총 268개의 북한 인권상황 개선 권고를 담은 보고서를 채택했음.
 - 유엔 인권이사회는 이날 스위스 제네바 유엔본부에서 열린 제27차 회의에서 지난 5월 북한의 전반적 인권상황을 점검했던 '보편적 정례인권검토(UPR)' 보고서에 대한 북한의 최종 입장을 청취하고 이를 정식 채택했음.
 - 그러나 북한은 268개 권고 사항 중 정치범 수용소 폐지, 공개처형 금지, 조직적이고 광범위하게 반인도적 범죄가 자행된 사실의 인정, 성분제 폐지 등

- 83개 권고는 지난 5월 회의에서 즉각 거부했으며, 이날 회의에서도 10개 권고안은 받아들이지 않겠다고 밝혔음.
- 북한이 추가로 거부한 10개 권고안은 사형제 현황 발표, 자의적이고 사적인 처형 금지, 구금자 명단 공개, 국제적십자사 등 국제기구의 완전한 접근 허용, 국제법에 따르는 국내법 개정 등임.
 - 아울러 이동의 자유 보장과 강제 송환자 처벌 금지 등 58개 권고안에 대해서도 사실과 다르지만, 현실적으로 수용할 방안이 있는지 검토해 나가겠다고 밝혔음.
 - 따라서 총 268개 유엔 인권이사회 UPR 권고안 중 북한이 사실상 받아들인 것은 여성에 대한 차별과 폭력 퇴치, 어린이에 대한 폭력 방지 등과 관련한 113개이며, 국제협약 비준 등 4개 권고는 부분적으로만 수용했음.
 - 북한 서세평 제네바대표부 대사는 회의에서 "북한은 유엔 아동권리협약 선택의정서에 서명하는 등 국제 인권메커니즘에 적극적으로 협력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면서 "그러나 내정간섭이나 국제적 압력은 배격할 것"이라고 밝혔음.

3. 탈북자

- 러, 탈북자 잡으면 당일 강제 북송(9/19. 서울신문)
 - 북한과 러시아는 러시아에서 체포된 탈북자를 강제 북송하는 내용의 협약을 발표하고 체결을 위해 논의를 진행 중인 것으로 보이며, 협약이 체결되면 러시아 국경수비대가 러시아 영내에서 검거된 탈북자들을 '당일 강제북송' 할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예상된다.
 - 최근 북·러 국경 지역 상황을 조사한 최영진 경희대 국제지역연구원 HK교수는 지난달 2일 북·러 국경 지역에 동행했던 러시아 정보기관 관계자로부터 이 같은 내용을 확인했다고 밝혔음.
 - 정치적 박해가 충분히 예상되는 탈북자를 강제 송환하는 것은 국제 인권 협약에 정면 배치되는 행위이지만 북한은 탈북자들의 월경이 심해지자 주민들의 탈출을 막기 위해 최근 러시아와 탈북자 강제 송환 협정을 맺으려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음.

- 이와 관련해 외교부 관계자는 "정부는 이와 관련해 러시아에 반대 의사를 전하고 대응방안을 강구하고 있다"고 밝혔다.

4. 이산가족

- 특이 동향 없음

5. 납북자

- "북한, '자국 내 일본인 생존자 면회' 日에 타진"(9/15, 연합뉴스)
 - 북한이 북·일 당국 간 물밑접촉 때 자국 내 일본인 생존자를 면회할 수 있도록 해 주겠다고 일본 당국자의 방북을 타진했다고 교도통신이 15일 보도했음.
 - 통신에 따르면 북측은 납치 재조사에 나선 지난 7월 초 이후 일본과 베이징 등에서 실시한 물밑 접촉에서 이 같은 방안을 거론한 것으로 보이나, 일본 측은 북한이 면회를 허용하겠다는 '생존자'에 일본인 납치 피해자가 포함돼 있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는 판단 아래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있음.
 - 일본 측은 북한이 면회를 허용하려는 생존자가 전후(戰後) 북한으로 건너간 재일 조선인의 일본인 처(1천800여 명 추정) 뿐일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고 통신은 전했다.
- 북한 "일본인 납북자 재조사에 1년 소요"(9/19, 연합뉴스)
 - 스가 요시히데(菅義偉) 일본 관방장관은 북한이 일본인 납북자 재조사에 1년이 걸릴 것이라고 18일 일본 측에 통보해 왔다고 밝혔다.
 - 스가 장관은 19일 기자회견에서 그동안 북한의 납북자 특별조사위원회 조사 내용 통보를 놓고 베이징 대사관 채널을 통해 북한 측과 협의해 왔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 스가 장관은 북한이 더 이상의 설명을 할 수 없는 이유조차 밝히지 않았으며 "일본은 북한 측의 조사현황에 대해 더 상세한 설명을 조기에 들을 필요가 있기

- 때문에 앞으로 베이징 대사관 루트를 통해 협의하겠다"면서 성의있는 대응을 주문하며 북한에 대해 우회적으로 '불만'을 표시했음.
- 일본 언론은 북한이 애초 일본에 밝힌 첫 보고시점을 사실상 넘긴 것으로 해석하고 아베 신조(安倍晋三) 정권이 잘못 대응하면 악재가 될 수 있다고 전망했음.
 - 북한이 조사 결과를 흥정 '카드'로 이용해 추가제재 완화 등을 요구할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음.
 - 이즈카 시게오(飯塚繁雄) 납치피해자 가족 모임 대표는 19일 내각부를 방문해 납치 문제 재조사에 관해 이하라 준이치(伊原純一) 외무성 아시아대양주국장으로부터 설명을 들었으며, 일본 정부에 확실한 방침에 근거해 초조함 없이 대응할 것을 주문한 것으로 알려졌다.

6. 국군포로

- 특이동향 없음

7. 대북지원

- 아일랜드 대북지원 전년비13% 감소(9/15, 자유아시아방송)
 - 아일랜드 국제개발청(IrishAid)은 아일랜드의 지난해 대북지원 규모가 1년 전보다 약 13% 감소했다고 밝힘.
 - 아일랜드 국제개발청이 최근 공개한 2013 연례보고서를 보면, 아일랜드 정부의 대북 인도주의 지원금은 약 40만 유로, 미화로 61만 7천 달러임.
 - 아일랜드의 대북지원은 유엔 산하 식량구호기구인 세계식량계획(WFP)을 통한 식량 지원에 집중됐음.
 - 피오누알라 퀸란 아일랜드 국제개발청 대변인은 아일랜드국제개발청의 지원체계를 통해 파악한 북한의 식량과 인권 상황을 바탕으로 대북지원 규모를 결정하며, 2014년 하반기와 2015년의 대북지원 규모는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고 밝힘.

- 정부, '북한 母子 보건지원사업' 1천330만弗 지원확정(9/18, 연합뉴스)
 - 정부는 18일 제266차 남북교류협력추진협의회를 열고 국제기구의 북한 모자 보건지원 사업에 남북협력기금 1천330만 달러(한화 약 138억 원)를 지원하는 남북협력기금 지원안을 심의·의결했다고 통일부가 밝혔다.
 - 이번 결정에 따라 정부는 세계식량계획(WFP)의 북한 산모·영유아 대상 영양강화식품 지원 사업에 700만 달러를, 세계보건기구(WHO)가 펼치는 북한 산모·영유아 대상 의료시설 개선 및 의약품 등 지원 사업에 630만 달러를 각각 지원하게 될 예정이다.
 - 정부는 또 이날 남북교류협력추진협의회에서 국내 민간단체의 인도적 대북지원 사업에 대한 남북협력기금 30억 원 지원 건도 의결했다.

- 남북관계 개선 대비, 통일부 예산 10.4% 증가(9/18, 연합뉴스)
 - 통일부의 남북관계 개선 상황을 염두에 두고 당국 차원의 대북지원 가능액을 크게 늘려 잡았기 때문에 내년 예산안이 올해 예산보다 10% 이상 높게 책정됐다.
 - 내년도 통일부의 전체 예산안은 올해 예산 1조3천358억 원보다 10.4% 증가한 1조4천752억 원이며, 특히 남북 간 인적 교류와 경험을 지원하기 위해 조성된 남북협력기금의 내년 사업비는 1조2천402억 원으로 올해 1조1천132억보다 11.4% 증가했다.
 - 통일부는 남북협력기금 중 당국·민간 차원의 대북 지원을 위해 잡아두는 '인도적 지원' 항목 예산을 올해 6천802억 원에서 7천524억 원으로 10.6% 늘려 잡았으며, 특히 '중점 인도적 지원' 예산을 올해보다 156.8%나 증가한 1천186억 원으로 증액했다.
 - 통일부 당국자는 '중점 인도적 지원' 항목에 대해 "북한 영유아 지원, 보건의료 협력, 산림녹화, 농업협력 사업을 추진하는 등 북한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중점 추진 분야의 인도적 지원을 하기 위한 것"이라며 "모자패키지 사업 등 취약 계층 대상 인도적 지원은 정치 상황과 무관하게 확대해나갈 것"이라고 설명했다.
 - '인도적 지원' 항목 분야에서 가장 큰 부분은 5천918억 원이 배정된 당국 차원의 지원 항목인데 이는 올해와 같은 수준으로 편성됐다. 이는 남북관계 개선을 전제로 북한에 식량 40만, 비료 30만을 지원할 수 있는 액수임.

- 의무수입 쌀 대북 원조 가능해질 듯(9/19, 연합뉴스)
 -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정부는 세계무역기구(WTO)에 쌀 관세화율과 쌀 시장 개방계획 등을 담은 관세 양허표수정안을 제출할 때 의무수입 쌀로 북한 등 해외원조를 하는 것을 금지해온 규정을 삭제할 계획임.
 - 이에 따라 의무수입물량인 밥쌀용 수입비중(30%) 등 쌀개방 이전에 적용해온 저율관세물량의 용도 규정도 없어지기 때문에 의무수입쌀로도 북한 등 해외 원조도 가능해질 전망이다.
 - 지금까지는 의무수입 물량으로 들여온 쌀은 국내시장에서만 판매해야 한다는 제한 때문에 다른 나라로 다시 수출하거나 대북원조 등에 전용할 수 없었음.
 - 이에 대해 농식품부 관계자는 "의무수입 쌀의 용도제한은 관세화 유예에 따라 생긴 의무"라면서 "이제 관세화를 통해 WTO 원칙으로 복귀하는 만큼 농업협정에 따른 수출·원조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고 말했음.

- 정부, 국내 민간단체 2곳 대북 인도적 지원 승인(9/19, 연합뉴스)
 - 통일부는 민간단체 '섬김'과 '민족사랑나눔'의 대북 인도적 지원 물품반출을 승인했다고 19일 밝혔으며, 구체적인 지원 품목과 규모 등은 공개되지 않았음.
 - 북한은 최근 '드레스덴 제안'에 대한 거부감 등을 이유로 예년과 달리 인도적 대북지원 물품을 잘 받지 않고 있지만, 이번 건에 대해선 물품 수령 동의를 한 것으로 알려졌다.
 - 정부 당국자는 "북한이 최근 인도적 지원 물품 수령에 대한 합의서 발행을 잘 하지 않는 분위기이지만, 예전부터 두드러지지 않게 지원을 해오던 단체의 지원에 대해선 수령을 하고 있다"고 말했음.

8. 북한동향

- 北, 9월 14일 억류 중인 미국인 관광객 '매튜 토드 밀러'에 대한 최고재판소 재판 진행 및 "6년 노동교화형" 선고(9.14, 중앙통신)
 - ※ 북한은 미국인 관광객'매튜 토드 밀러(24세)'가 4월 10일 입국심사과정 망동으로 해당기관에서 억류, 조사 중에 있다'고 보도한 바 있음(4.25, 중앙통신)

- 조선인권연구협회가 발표한 '인권보고서'는 '공화국의 인권실상을 포괄적이며 종합적으로 반영한 것'이라며 '공화국 정부는 인권보장을 위한 공정한 기준을 설정하고 인민들에게 사회적 인간의 모든 권리를 보장해주고 있다'고 주장(9.17, 중앙통신 논평/공화국의 인권실상에 대한 공정한 반영)

© 북한인권연구센터 제공